

반전평화연대 이슈페이퍼

한국정부의

파병상황과

문제점

반전평화연대
antiwar-korea.org



글 심는 순서

평화유지군 5년, 동맹부대가 레바논에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가	03
소말리아 파병의 현황과 문제점	23
UAE 원전수주 백지화하고, 위험적 아크부대 철군하라!	44
국군 해외파병연장에 관한 이슈 페이퍼-아이티 단비부대	61
오수노부대, 아프가니스탄 파병의 진실	86



레바논

(동맹부대+레바논 평화유지군)

평화유지군 5년, 동맹부대가 레바논에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가

1.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 현황
2.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의 부당성
3. 결론

평화유지군 5년, 동명부대가 레바논에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가

김태경 |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1.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 현황

- 한국 국군은 2006년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2일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FIL,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파견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후 파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참모장교 2명을 UNFIL 사령부에 미리 파견하였고, 2007년 1월에는 합참 작전부장을 단장으로 유관부처 관계관으로 구성된 현지 협조단을 레바논에 파견하였다. 동명부대는 2007년 7월 레바논에 파견되어 UNFIL 서부여단 예하부대로 편성되어 임무를 시작하였다.
- 한국군 동명부대는 지난 7월 19일자로 레바논의 남부 접경지대 티르에 파병한 지 5년이 되었다. 7월 12일 5년차를 맞는 동명부대 10진에 이어 11진이 출국한 상태이다. 동명부대는 359명 규모의 보병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연인원 1,681명이 파견되었다. 부대 파견의 근거는 2006년 7

월 유엔 결의안 1701호에 따른 2006년 8월 17일 유엔의 평화유지군 요청이다.

- 현재 국방부는 올 하반기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동명부대의 파견 연장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파견 연장 대상인 한국군 5개 파병부대의 업무성과와 실태조사를 위한 업무평가단을 편성, 파견하였다. 6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아랍에미리트연합의 한국군 파병 부대에 대한 업무평가단에 이어 7월에는 레바논과 아이티에 대한 평가단을 조직하였다.
-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은 부대 단위와 개인 단위로 구성된다.

[표 1] 레바논 파병 현황 (2012.9.13. 현재)

구분	부대	현재 인원	지역	최초 파병	교대 주기
부대 단위	레바논 동명부대	348	티르 (Tyre)	'07.7월	6개월
개인 단위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FIL)	4	나쿠라 (Naqoura)	'07.1월	1년
총 계		352			

* 출처: 국방부, 국방부, 해외파견 현황. 2012.09.13

[표 2] 레바논 파병 현황

파견기간	파견 부대-요원	파견 인원
2007.1.16.~현재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	참모장교 3명(연인원 8명)
2007.7.19.~현재	보병대대(동명부대)	359명(연인원 1,747명)
2008.3.10.~현재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	서부여단 5명(연인원 14명)
		367명

* 출처: 국방부 홈페이지

2.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의 부당성

2-1.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의 본질을 무시하는 일방적 파병

- 2006년 7-8월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은 이스라엘의 일방적 점령과 침략에 대해 레바논인들이 무장, 저항한 전쟁이다.
-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레바논 동명부대의 활동의 근거는 2006년 유엔 결의안 1701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레바논 파견 유엔안보리 결의안 1701호(2006.8.11.)의 목표는 “이스라엘군-헤즈볼라간 적대행위 중단 감시, 레바논군의 레바논 남부 배치 지원(레바논군은 1978년 이래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지 못해 왔음), 전쟁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레바논군을 지원하여 블루 라인(Blue Line)-리타니(Litani) 강사이의 지역에 레바논군과 UNIFIL 외에 무장조직의 활동 저지, 레바논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여타 레바논 국경에서의 무기밀반입 차단”으로 요약된다. 1701호가 명시하는 레바논군(LAF: Lebanon Army Force)과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UNIFIL) 외 무장조직이란 남부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의미하며,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 결의안은 사실상 전쟁의 본질과 근본적 해결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다.
- 2006년 7-8월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은 6월 20일경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와 폭격에 대하여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의 무력행위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이스라엘군 병사 2명을 납치

하면서 시작되었다. 7월 12일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에 대대적 폭격을 가했고, 명백한 이스라엘군의 우위로 종료될 것이라 예상되었던 전투는 예상외로 헤즈볼라의 로켓포 공격이 두드러지면서 치열하게 지속되었다. 34일간의 전쟁의 과정에서 특히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폭격에 의한 레바논 민간인들의 학살 참상이 전해지면서 이스라엘군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한 국제적 규탄이 일어났다.

- 그럼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과거 레바논 지배 경험이 있는 프랑스 등의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레바논의 헤즈볼라 사이의 오랜 분쟁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적대행위의 중단과 사실상 헤즈볼라의 무장해제와 레바논군(LAF)의 치안유지를 골자로 하는 유엔 결의안을 합의하고 유엔 평화유지군 주둔을 강행하였다. 전쟁 직후 헤즈볼라가 유엔 결의안에 대하여 무장해제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고 이스라엘군의 침략에 대한 저항을 분명히 한 것이나 이러한 헤즈볼라의 입장이 레바논 내에서 확고한 지지를 얻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유엔의 평화안과 평화유지군의 활동은 어떤 답도 주지 못한다.
- 국방부 홈페이지나 국내 파병부대에 대한 언론 보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의 진실에 대한 성격 규명은 한국군의 레바논 평화유지군 참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의 레바논 내 적대행위 중단과 헤즈볼라 무장조직의 해체를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과 평화유지군의 근거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헤즈볼라가 2006년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확고부동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2006년 34일간의 전쟁은 레바논에서 약 1,100

여명의 사망자를 냈고 수백만의 난민을 발생시켰는데, 파괴당한 곳은 레바논-이스라엘 접경지대에서도 확연히 같았다. 기독교도와 수니파의 마을은 이스라엘 접경에서 10-20km 떨어져 있는 마을이라도 말끔한 반면, 헤즈볼라가 속한 시아파 무슬림의 마을은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 이스라엘의 이러한 ‘정밀 폭격’과 더불어 공격당한 민간인 마을에서 벌어진 학살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제적인 분노를 자아낸 카나 마을의 학살에서는 사상자의 대부분이 어린이였다. 전쟁 기간의 폭격과 이스라엘 지상군의 공격 이후에도 휴전이 확실시되던 전쟁 마지막 사흘 간 이스라엘군 전폭기가 살포한 집속탄은 지금까지 레바논인을 위협하고 있다.¹⁾ 미국제 M42, M77과 이스라엘제 M85는 남부 레바논에 집중적으로 뿌려졌고, 영국의 대인지뢰 관련 비정부기구인 ‘랜드마인액션’은 남부 레바논에서 폭발하지 않은 집속탄을 모두 없애는 데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²⁾
-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의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반증하는 것은 유엔 결의안 발효와 유엔 평화유지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쟁 직후 무인 정찰기를 띄워 레바논 상공을 상시적으로 정찰하고 있으며³⁾ 이스

1) 유엔의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세 기간 동안 레바논엔 약 100만 발의 집속탄이 투하됐다. 이 가운데 90%는 교전이 멈추기 72시간 전에 뿌려졌는데, 아직도 약 1만9천여 발의 불발탄이 방치돼 있다고 한다. <데일리스타>는 2006년 8월 휴전이후 최근까지(2007년 초) 이들 불발 집속탄에 의해 2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잔인한 집속탄,” 『한겨레 21』, 2007.02.09. 제647호

2) [중동3개국 르포 ① 레바논] “적대감은 블루라인을 넘었다,” 『한겨레 21』, 2007.03.09. 제650호

3) “헤즈볼라와 대화 채널 없다” 유니필 부사령관 네흐라 준장 인터뷰, 『한겨레 21』, 2007.08.17. 제673호

라엘 정부가 “휴전과는 무관하게 헤즈볼라 주모자들을 색출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이스라엘은 휴전 이후 한 달 동안 1백여 차례나 휴전협정을 위반하며 레바논 영토에 대한 침입을 자행했지만 유엔 평화유지군은 어떤 제재조치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⁴⁾ 이러한 현실은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이 팔레스타인 해방투쟁, 헤즈볼라의 반이스라엘 투쟁,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의 중동에서의 무력도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한다.

○ 2006년 전쟁 일지⁵⁾

▲ 7.12 = 헤즈볼라, 이스라엘 병사 2명 납치..이스라엘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레바논 침공 개시

▲ 7.13 = 이스라엘 전투기, 베이루트 국제공항 활주로 폭격..레바논 남부 공습으로 35명 사망 / 헤즈볼라, 나하리야 등 이스라엘 북부 로켓 공격으로 2명 사망

▲ 7.14 = 이스라엘, 도로 등 레바논 사회기반 시설 폭격..헤즈볼라 운영 알-마나르 방송국 공습 / 헤즈볼라, 이스라엘 해군 함정 미사일 공격..이스라엘 병사 4명 사망 / 올메르트 총리,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 중단, 피랍병사 석방, 무장해제 시까지 레바논 공격 지속 천명

4) 이스라엘이 무인 항공기를 띄워 레바논 상공에서 정찰을 하는 것은 명백한 휴전협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은 아무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유니필 부사령관 네흐라 준장은 “레바논 영토와 상공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다. 적발될 때마다 비행기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있다. 국제사회가 함께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다. 지금으로선 유니필도 답은 없다.”고 밝혔다. “헤즈볼라와 대화 채널 없다” 유니필 부사령관 네흐라 준장 인터뷰, 『한겨레 21』, 2007.08.17. 제673호

5) 연합뉴스 2006.08.13.

- ▲7.15 = 이스라엘, 남부 베이루트 헤즈볼라 본부 공습 파괴..항구 등 기간시설 공습 계속 /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전 선언 / 레바논 주재 각국 대사관, 자국민 소개 계획 마련
- ▲7.16 = 헤즈볼라, 이스라엘 항구도시 하이파 로켓 공격..8명 사망, 20여 명 부상 / 올메르트 총리, 하이파 공격에 대대적인 보복 경고 / 나스랄라, 이스라엘 공격은 “이제 시작이다”고 선언 / 이란, 이스라엘에 “시리아 공격 말라” 경고
- ▲7.17 = 이스라엘, 레바논 공격 계속.45명 이상 사망 / 레바논 거주 외국인 대피 본격화 /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레바논 남부 분쟁지역에 다국적군 배치 촉구
- ▲7.18 = 사우디 아라비아, 아난 총장의 다국적군 배치안 지지 입장 천명 / 이스라엘의 공세로 1주일 간 레바논인 200여 명 사망
- ▲7.19 = 이스라엘, 나스랄라 제거 위해 베이루트 남부에 23t 폭탄 투하 / 이스라엘 특수부대, 레바논 남부 진입
- ▲7.20 = 이스라엘 군, 남부 레바논 진격 작전 본격화..헤즈볼라 전투요원과 교전 / 이스라엘 아파치 헬기 2대 레바논 접경지대서 공중충돌..조종사 1명 사망
- ▲7.21 = 이스라엘 예비군 동원령 발효..레바논인 사망자 300명 돌파
- ▲7.22 = 이스라엘 지상군, 레바논 남부의 마룬 알-라스 마을 등 점령 / 라이스미 국방장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새로운 중동을 만들기 위한 산통”이라고 옹호
- ▲7.23 = 이스라엘 공습으로 레바논 남부 티레에서 레바논인 사진기자 1명 등 12명 사망 / 헤즈볼라, 개전 이후 이스라엘에 총 2천200기 이상 로켓 발사

- ▲7.24 = 라이스 미 국무, 레바논과 이스라엘 방문해 항구적인 휴전 주장하며 조기 휴전 가능성 일축
- ▲7.25 = 레바논 남부서 유엔평화유지군 병사 4명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
- ▲7.26 = 레바논 사태 해결 위한 로마회의 개막..미국과 이스라엘 반대로 즉각적인 휴전 결의 도출 실패
- ▲7.27 = 이스라엘 “로마회의로 레바논 내 공격을 사실상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며 남부 레바논 지역 대규모 공습
- ▲7.28 = 조지 부시 미 대통령-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레바논에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합의
- ▲7.29 = 푸아드 시니오라 레바논 총리, 이스라엘에 1967년 점령한 세바 팜스 지역에서 철수 촉구 / 나스랄라, 라이스의 중동방문은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대 이스라엘 로켓공격 강화 경고
- ▲7.30 = 이스라엘의 카나 마을 공습으로 어린이 등 약 60명 사망..이 사건에 격분한 베이루트 시민들 유엔 사무소 난입 시위 / 레바논 정부, 라이스 장관의 베이루트 재방문 거절
- ▲7.31 = 이스라엘 카나 마을 참사 계기 남부 레바논 지역 공습 48시간 잠정 중단 선언 / 이스라엘 내각, 헤즈볼라 소탕작전 확대 승인
- ▲8. 1 = 이스라엘 지상군, 레바논 남부 진격 확대..이스라엘 법무장관, 헤즈볼라 요원 300여 명 사살 주장
- ▲8. 2 = 헤즈볼라 하루 동안 이스라엘에 230여 기 로켓 발사 / 올메르트, 헤즈볼라 거점지역인 레바논 남부에 국제평화유지군 배치될 때까지 공세 지속 천명
- ▲8. 3 = 나스랄라,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폭격 시 텔아비브 공격 경고

- ▲8. 4 = 이스라엘, 시리아 인근의 베카계곡 폭격해 농부 33명 사망 / 미국-프랑스 유엔 안보리 휴전 결의안 문구 합의 근접
- ▲8. 5 = 레바논, 이스라엘 군 철수 요구 명시되지 않은 미국-프랑스 휴전 결의안 거부 천명
- ▲8. 6 = 헤즈볼라의 로켓 반격으로 개전 후 최대 규모인 이스라엘인 하루 최소 15명 사망
- ▲8. 7 = 레바논 정부, 이스라엘 군 남부 지역 철수시 1만 5천 명 병력 파견 제한 / 유엔 안보리, 미-프랑스 간 견해 차로 휴전 결의안 표결 연기 /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세 강화로 하루 동안 60여 명 사망
- ▲8. 8 = 이스라엘 군, 레바논 영토 내 8km까지 진격했다고 발표 / 아랍연맹, 레바논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유엔 비난
- ▲8. 9 = 남부 레바논서 이스라엘 군과 헤즈볼라 교전..이스라엘 병사 15명 사망 / 이스라엘 군, 레바논 영토 내 20km까지 진격 중이라고 발표 / 나스랄라, 안보리 휴전 결의안 초안을 반대하지만 레바논 군 남부지역 배치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
- ▲8.10 = 레바논 남부 전략요충지인 마르자운 마을에서 이스라엘 군과 헤즈볼라 전투 격화
- ▲8.11 = 이스라엘, 러시아 제안 '72시간 잠정 휴전' 거부..이스라엘 공습으로 레바논인 최소 26명 사망 / 개전 후 한 달 간 사망자 레바논 측 1천41명, 이스라엘 측 124명으로 잠정 집계
- ▲8.12(중동 시간) = 유엔 안보리 휴전 촉구 결의 채택 / 이스라엘 군, 휴전 결의 불구 레바논 공세 계속

2-2.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 명분의 허구성

- 동명부대가 소속된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은 레바논의 평화와 분쟁의 안정적 해결보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동 이해에 공헌하고 있다.
- 국방부가 선전하는 한국군 파병의 주요 근거는 파병부대 파견이 세계 속의 한국군으로서의 입지를 드높이고 한국군의 전력 증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한국군은 평화유지군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분쟁 지역의 안정화에 직접적인 공헌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논리는 유엔의 평화유지군의 활동이 정당하고 평화지향적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러나 레바논 내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활동은 친미적, 친이스라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질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데 무기력할 뿐 아니라 반평화적이다.
- 최근 2012년 8월로 종료되는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의 활동 연장을 위한 안건을 담은 레바논에 대한 유엔 안보리 8월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의 내전상황이 치열해짐에 따라 시리아와 레바논 접경지대에 병력이 집중된 레바논군(LAF)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유니필의 파견 연장이 필요하다고 한다.⁶⁾ 유엔의 레바논 특별 조정자(Special Coordinator) 데릭 플럼블리(Derek Plumbly)는 현재 유니필의 활동지역의 상황이 안정되어 있으며 유니필의 병력규모도 작년에 11,800명 정도로 감축한 데 이어 11,200명으로 축소하는 중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

6) Security Council Report, August 2012 Lebanon

고서는 최근 시리아의 내전으로 이웃 레바논에 주둔하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1년 연장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시리아 접경지대를 통하여 레바논 내 무기반입이 증대되고 분쟁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시리아와 인접한 레바논 북부로 레바논군이 이동함에 따라 이란과 시리아의 지원을 받는 남부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대한 감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 유엔 안보리 정기 월간보고서에 나타나는 레바논 상황과 유니필의 대응은 모순적이다. 2012년 7월 보고서를 살펴보면,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의 부대 책임자마저 유엔 평화유지군이 작금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갈등의 정치적 이슈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밝히고 있는 유니필의 역할은 폭력행위의 중지를 유지하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이용해 영구적인 정전과 장기적 해결을 지향하는 것이다.⁷⁾ 그럼에도 8월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중요한 안정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인정하고 있다.⁸⁾ 그런데 여기서 특히 최근의 시리아의 불안정한 상황에 비추어 유엔 평화유지군의 안정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유엔 평화유지군의 존재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다시 말해, 7-8월 유엔 안보리의 레바논 보고서는 레바논에 주둔하는 유엔 평화유지군이란 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존재하기보다는 지역 내 역학관계에 안정적 역할을 하기 위해 복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7) Security Council Report, July 2012 Lebanon

8) Security Council Report, August 2012 Lebanon

-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의 활동은 197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주둔하는 과정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있어 무기력하다.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은 1978년 3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425-426호에 따라 처음 구성되었다. 당시 결의안은 레바논을 침공한 이스라엘군의 철수와 국제적 평화·안정 복원, 레바논 정부의 역할 회복을 촉구하였다.⁹⁾ 이에 따라 1978년 3월23일 평화유지군 1진이 레바논에 주둔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평화는 곧 파괴되었다. 1982년 6월 이스라엘군은 ‘갈릴리의 평화’라는 작전명 아래 레바논 남부지역을 다시 침공했고, 이어 작전명 ‘책임’(1993)과 ‘분노의 포도’(1996)가 뒤따랐다.¹⁰⁾
- 지난 2000년 이스라엘이 블루 라인(Blue Line)으로 철군하면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다시 주둔하게 되었지만, 이미 1982년 유엔 평화유지군이 유명

9) 1978년 유엔 평화유지군이 레바논에 주둔한 것은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지속된 내전의 결과였다. 이슬람과 기독교 레바논인 간에 벌어진 내전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개입으로 더욱 치열해졌고, 특히 이스라엘의 침공은 1978년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 이후에도 계속되어 현재에 이른다. 2006년 7-8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레바논에서의 확고한 정치적 실체를 알린 헤즈볼라(신의 당이라는 의미)는 1982년 창설되어 이스라엘의 점령 아래 있던 남부 레바논을 무대로 강력한 무장투쟁과 정치 참여를 병행하며 성장한 이슬람주의 단체다. 내전이 끝난 후 하산 나스랄라가 이끈 헤즈볼라는 총선에 참여해 전체 128석 중 12석을 얻었다. 로켓탄과 미사일 공격을 통한 헤즈볼라의 무장투쟁은 2000년 5월 이스라엘군이 18년여 점령해온 레바논 남부에서 철군을 결정한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2005년 ‘백양목 혁명’의 한복판에서 치른 선거에서 헤즈볼라는 기존 8석에서 대폭 늘어난 23석을 얻었고, 이를 기반으로 7월 구성된 레바논 연립정부에 참여해 2명의 각료를 배출하기도 했다. “‘나스랄라’라는 이름의 로켓탄,” 『한겨레 21』, 2006.08.08, 제621호

10) “‘위태로운 평화’에 휘말리려나,” 『한겨레 21』 2006.12.01, 제637호

무실한 개념으로 뒤집힌 뒤였다.¹¹⁾ 이후에도 분쟁은 지속되었고, 2006년 7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이 발발하였다. 당시 유엔군은 보급품 수송로가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스라엘-헤즈볼라 양쪽의 공세에 끼어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급급했다. 침공 초기인 7월24일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현지 유엔군 관계자의 말을 따 “교전의 한가운데 붙잡혀 있다”고 전한 바 있다.¹²⁾ 1978년 이후 현재까지 레바논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은 유엔 평화유지군 관계자는 병사 278명에 지역 및 외국 스태프 등을 포함하면 294명에 이른다.¹³⁾

- 사실상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위태롭게 자리한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은 1982년과 2006년 두 차례의 전면전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력함을 증명한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유엔군이란 쓸모없으며, 헤즈볼라의 관점에서 유엔군이란 친이스라엘적이다. 특히, 헤즈볼라와 레바논인들에게 유엔 평화유지군이란 “이스라엘을 막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존재이다.¹⁴⁾
- 무엇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레바논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의 중동 전략이다. 미국은 2006년 전쟁 초기 7월 13일, 이스라엘의 폭격을 규탄하고 군사행동을 중지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

11) Mandate, UNIFIL homepage, <http://www.un.org/en/peacekeeping/missions/unifil/mandate.shtml>

12) “위태로운 평화에 휘말리려나”, 『한겨레 21』 2006.12.01. 제637호

13) Facts and Figures, UNIFIL homepage, <http://www.un.org/en/peacekeeping/missions/unifil/facts.shtml>

14) “이스라엘은 반드시 다시 온다”, 『한겨레 21』, 2007.03.09. 제650호

사하여 부결시켰다.¹⁵⁾ 미국은 2006년 이스라엘의 무차별한 군사공격에 대한 이슬람권의 대대적인 분노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적 이유’, 다시 말해 미국 내 거대한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늘 그랬듯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었다. 베이루트가 잿더미로 변하고 있던 시점에서 미 상원과 하원은 18일, 20일, 각각 이스라엘의 행동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어떤 말보다도 이스라엘에 대한 미 정부의 막대한 규모의 무기 지원은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에서 미국이 어느 편에서 있는지를 증명한¹⁶⁾다.

15) “미국에도 책임 물어야 한다”, 『한겨레 21』, 2006.08.08. 제621호

16) 지난해 8월 말 미 의회조사국(CRS)이 내놓은 <개발도상국으로의 재래식 무기 이전: 1997~2004> 보고서를 보면, 1997~2004년 이스라엘은 모두 84억달러어치의 무기를 외국에서 사들였는데, 이 가운데 84.5%에 이르는 71억달러어치가 미국산이다. <인터프레스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스티븐 존스 샌프란시스코대 교수는 “미 무기수출 통제법 제4조는 외국 정부에 인도된 미국산 무기는 반드시 국내 치안이나 합법적 방어행위에만 이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레바논의 민간 사회 기반시설과 인구 밀집지역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합법적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미 정부는 이스라엘로 무기를 넘겨주는 것을 금지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전통적인 군사원조와 중동 분쟁에 있어서 미국의 이스라엘 편드는 펠레야 펠 수 없는 두 나라의 관계를 반증한다. ‘미국이스라엘홍보위원회’(AIPAC, 에이팩)는 전미총기협회(NRA), 전미은퇴자협회(AARP)와 함께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3대 알력단체이며, 중동 문제 권위자인 <워싱턴 중동문제 리포트>(WRMEA) 최신호에 따르면, “미국이 이스라엘 건국 이듬해인 1949년부터 올해까지 이스라엘에 직접 지원한 금액은 줄잡아 1080억달러에 이른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액은 한 해 평균 약 30억달러에 이르며, 이는 이스라엘 국민 1인당 약 600달러씩 지원하는 꼴”로, “이스라엘은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해외원조 최대 수혜국이며, 미 정부는 전체 해외원조 예산의 5분의 1을 이스라엘에 쏟아붓고 있다.” “미국에도 책임 물어야 한다”, 『한겨레 21』, 2006.08.08. 제621호

- 전쟁 이후 레바논의 정세는 더욱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남부 레바논 뿐 아니라 북부 레바논에서 레바논군과 팔레스타인 난민촌 내 이슬람 조직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전쟁이 사실상 팔레스타인 자치조직과 헤즈볼라의 무력화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다.¹⁷⁾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적할 만한 북부 레바논의 수니파 이슬람 조직을 은밀히 지원한다는 주장으로, 레바논 내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수니파 이슬람 세력을 키워 이 지역의 혼란을 자초함으로써 레바논군에게는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무력개입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실제 2008년 북부 레바논에서 수니파 이슬람 조직 ‘파타 알 이슬람’은 레바논군과 충돌하면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저항하였고, 레바논군은 파타 알 이슬람이 있던 난민촌 신캠프만이 아니라 구캠프도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팔레스타인 조직들에 대한 의도적인 탄압이 아니냐는 비난을 샀다.

○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 현황¹⁸⁾

책임자	파올로 세라 장군 (이탈리아)
지위	2013년 8월 31일까지 활동 연장 승인 근거: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64호 (2012.8.30.)
규모	근거: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 (2006.8.11) 15,000명 병력에 다국적 및 현지 민간요원 지원 11,530명 (2012년 7월 31일) 345명 다국적 민간요원, 662명 현지 민간요원(2012.6.30 추산)

17) “레바논, 무차별 테러와의 전쟁,” 『한겨레 21』, 2007.08.10. 제672호

18) Facts and Figures, UNIFIL homepage, <http://www.un.org/en/peacekeeping/missions/unifil/facts.shtml>

병력 파견 국가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벨기에, 브라질,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크로아티아, 키프러스, 덴마크, 엘살바도르, 프랑스, 마케도니아, 독일,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네팔, 나이지리아, 포르투갈, 카타르, 대한민국, 세르비아,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리랑카, 탄자니아, 동티모르, 터키
사망자	총계 294명(병력: 278명, 군사 감시요원: 2명, 다국적 민간요원: 8명, 현지 민간요원: 6명)
재정	예산(2012.7.1.-2013.6.30.): 546,902,700 달러

2-3. 레바논 파병부대의 안전 문제

- 국방부와 정부의 설명과 반대로 동명부대가 배치된 티르(Tyre) 지역은 무슬림 저항세력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으로, 실제 위험한 전투와 무력시위에 노출된 지역이다.
- 국방부의 주장과 국내 언론의 레바논 동명부대에 대한 보도는 한결같이 두 가지를 강조한다. 하나는 레바논군과 연합하여 위험이 어느 정도 수반되지만 용맹한 작전 수행을 통해 무장한 테러조직의 폭탄을 해체하고 발생가능한 무력 시위를 정찰을 통해 예방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태권도 교실과 한글, 컴퓨터 교실을 통해 티르 지역을 포함한 남부 레바논 지역에서 한국을 알리고 국익은 물론 국가 이미지를 신장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보도는 심지어 동명부대가 레바논인들에게 ‘알라카 준 선물’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전한다.
- 그러나 현실은 보다 엄중하다. 유엔 안보리의 7월 레바논 보고서에 따르

면, 올 4월 23일에 티르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7명이 다쳤다.¹⁹⁾ 이 보고서는 유사한 사건이 티르에서 2011년 11월 16일, 12월 28일에도 일어났다고 지적한다. 사고 지역은 언론에 따르면 유엔 직원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지목된다. 그런데도 국내 보도가 강조하는 것은 동명부대가 2007년 7월부터 이 위험지역에서 단 한 건의 인명 사고 없이 감시작전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이다.²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사고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웃지 못할 보도 행태가 아닐 수 없다.

- 동명부대는 현재 티르 시내에서 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부르즈 앓 쉬말리(북쪽의 망루)에 주둔하면서 남북 7km, 동서 10km의 작전지역을 맡고 있다. 주 임무는 레바논을 남북으로 갈라놓는 리타니강 이남의 담당 작전 지역에서 불법 무장세력의 활동을 억제하고 불법무기의 반입을 통제하는 감시․정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작전 지역을 구성하는 5개 마을은 전체 주민 5만 여명으로 이뤄져있고, 90%가 이슬람 시아파이다. 2006년 당시 이 지역은 헤즈볼라 무장세력의 주 근거지로 이용되었고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이 발사되기도 하였다.

2-4. 레바논 파병 관련 예산

-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에 따른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집행 예산은 다음과 같다.

19) Security Council Report, July 2012 Lebanon

20) 연합뉴스, 2012.07.09

[표 3] 파병부대별 예산(단위 : 억 원)

연도	레바논 동명부대	소말리아 청해부대	아이티 단비부대	아프가니스탄 오쉬노부대
2007	370	-	-	-
2008	196	-	-	-
2009	215	284	-	-
2010	229	342	282	471
계	1,010	626	282	471

* 출처: 국방부, 국방백서 2010

3. 결론

-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 5년은 레바논에 안정된 평화를 안겨주지 않았다. 2006년 7-8월 전쟁은 이스라엘이 ‘자국군 2명 구출’이라는 이름으로 레바논을 축대밭으로 만든 전형적인 침략과 점령 시도이다. 2006년 8월 휴전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쌍방의 적대행위 중단, 남부 레바논 내 무장조직 해체를 목표로 걸었으나, 이러한 결의는 전쟁의 본질과 레바논 내 상황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은 이러한 레바논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중동 분쟁에서 반평화적인 역할을 자임하는 야만적 행위이다. 이스라엘의 폭격과 미국의 군

사#8228;정치적 지원으로 학살과 전쟁의 참상을 겪은 남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목표로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레바논인들이 원하는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레바논의 전쟁의 성격을 고찰하면, 레바논의 진정한 평화와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한국군의 동명부대가 아니라 전쟁 참상의 진상 규명과 이해이다. 한국군 동명부대의 파견 연장이 아니라 레바논에서의 파병부대 철군이 레바논 평화와 안정의 해법이다.



소말리아

(청해부대+개인단위)

소말리아 파병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군의 소말리아 파병 현황

2. 소말리아 파병의 문제점

- 2-1. 해군 파병은 한국인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 2-2. 해군 파병으로 해적을 퇴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2-3. 소말리아 파병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의 일환
- 2-4. 부적절한 파병의 근거
- 2-5. 개인단위 파병의 문제점
- 2-6. 부적절한 예산 운용

3. 결론

소말리아 파병의 현황과 문제점

수열 | 사회진보연대

1. 한국군의 소말리아 파병 현황

- 한국 국군은 2009년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의안번호 1803623)에 따라 2009년 3월 13일 1진(문무대왕 함) 출항, 2009년 4월 14일 아덴만 도착, 임무 시작 이후 6개월을 교대주기로 현재까지 소말리아 해역에서 파병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 국군의 소말리아 지역 파병은 부대단위와 개인단위로 나뉜다.
- 부대단위로는 2012년 8월 13일 현재 청해부대가 LYNK 헬기 1대와 고속단정 3정을 탑재한 4,500t 급 구축함 1척과 313명(승조원, 해군 항공요원, 검문검색팀 등)의 인원이 파병되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일대(아라비아해 국제권고 통항로)에서 활동하고 있다.
- 개인단위로는 CJTF-HOA(Combined Joint Task Force - Horn of Africa)에 5명(협조장교, 참모장교)이 파병되어 지부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 지부티는 프랑스령에 속해 있다 1977년 독립한 국가로, 소말리아의 북서쪽 국경에 접해 있다. 소말리아와는 다른 국가지만, 소말리아 해역을 대상으로 하

는 CJTF-HOA 작전을 수행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소말리아 파병으로 볼 수 있으며, 국방부 홈페이지 '한국군 해외파병 현황'에도 CJTF-HOA 파병을 소말리아 지역 파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1] 소말리아 파병 현황(2012.8.13 현재)

구분	부대	현재인원	지역	최초파병	교대주기
부대단위	청해부대	313	소말리아 해역	'09.3.	6개월
개인단위	CJTF-HOA	협조장교 4	지부티	'09.3.	6개월
		참모장교 1		'03.2.	6개월
총계		318			

※ 출처: 국방부, 「한국군 해외파견 현황(2012.9.1.기준)」, 2012.9.3.

2. 소말리아 파병의 문제점

2-1. 해군 파병은 한국인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 청해부대의 선박 호송 임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생명은 계속 위협받고 있다
- 국방부는 홈페이지 '부대단위 평화유지활동'에서 '아덴만 해역에서 청해부대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으로 2009년 12월 현재까지 한국 선박은 단 한 건의 해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선전하고 있다.
- 그러나 이는 2009년에만 해당하며, 청해부대가 선박 호송 임무를 수행하

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들의 신변 위협은 지속되고 있다.

- 해적의 활동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어 소말리아 해적을 막기 위해 순찰해야 하는 범위만 해도 아덴만, 오만만, 아라비아해, 홍해, 인도양 등 매우 넓다. 그러나 군함의 보통 항해속도는 30노트 정도로, 시속으로는 약 55km 정도에 불과하다. 직접 호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적의 나포 행위를 사전에 막거나 도중에 저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표 2] 한국 선원 승선 선박의 소말리아 피랍 현황

피랍일	선박명(한국인)	국적(선종)	피해내역
2006.4.4	동원호 (8명)	한국 (어선)	소말리아 연안에서 피랍, 117일 만에 석방
2007.5.15	마부노 1,2호 (4명)	탄자니아 (어선)	소말리아 연안에서 피랍, 173일 만에 석방
2007.10.28	골든노리호 (2명)	파나마 (화물선)	소말리아 연안에서 피랍, 1명은 당일 탈출, 1명은 45일 만에 석방
2008.9.10	브라이트 루비호 (8명)	한국 (벌크선)	아덴만에서 피랍, 37일 만에 석방
2008.11.15	캠스타 비너스호 (5명)	파나마 (화물선)	아덴만에서 피랍, 88일 만에 석방
2010.4.4	삼호드림호 (5명)	마셜군도 (유조선)	인도양에서 피랍, 217일 만에 석방
2010.10.8	금미305호 (2명)	케냐 (어선)	케냐의 라무 10마일 해상에서 피랍, 124일 만에 석방
2011.1.15	삼호주얼리호 (8명)	몰타 (화물선)	아라비아해 연안에서 피랍, '아덴만의 여명' 작전으로 6일 만에 구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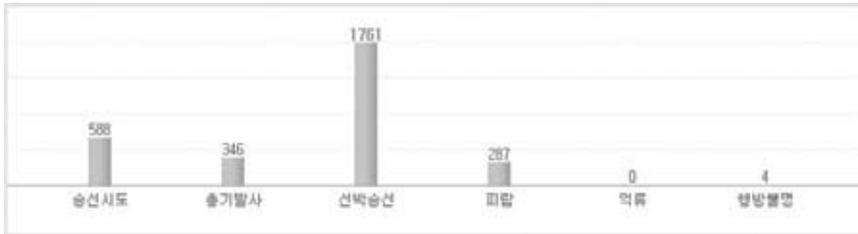
2011.4.30	제미니호 (4명)	싱가포르 (화물선)	케냐 몸바사 남동쪽 193마일 해상에서 피랍, 11월 30일 선원 21명 석방, 한국인 선장 1명과 선원 3명만 2012년 9월 10일 현재 500일째 억류 중(이 중 선원 1명은 수개월째 연락 두절)
-----------	--------------	---------------	--

- 해군의 공격적인 군사 작전이 오히려 한국인의 생명을 위협한다
- 2011년 4월 30일 아프리카 케냐의 몸바사항으로 향하던 중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납치된 싱가포르 선박 제미니호는 선박회사 ‘글로리 십’의 협상을 통해 11월 30일 선원들(인도네시아인 13명, 중국인 5명, 미얀마인 3명)이 풀려났지만, 한국인 4명만 풀려나지 못했다. 한국 언론의 확인 결과 선원 1명은 수개월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나머지 3명의 건강 상태도 매우 악화된 상황으로 추정된다.
- 외교통상부는 해적들이 한국인 인질을 잡고,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한국에 붙잡혀간 소말리아 해적 5명의 석방과 사상한 해적 8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아덴만의 여명’ 작전과 같이 선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군사 작전을 수행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오히려 한국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 해군의 강력한 대응은 해적 행위의 리스크를 높인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해적 행위를 억제하기보다는 인질의 몸값을 키우게 되고 협상이 더욱 어려워져 인질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 당장의 해적 피해를 줄이는 것은 선박의 자체 대비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최근 10년 간 발생한 해적의 공격 유형을 보면 선박승선(58.98%)이 압도적으로 많고, 승선시도(19.69%), 총기발사(11.59%), 피랍(9.61%) 등의 순이다.

[그림 1] 최근 10년 간 해적의 공격 유형



※ 출처: 국토해양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 이러한 해적 피해 유형을 보더라도 승선 저지가 해적 피해를 줄이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해군 함정의 호송 임무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다.

-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는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 행위의 예방 및 억제에 관한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선장 및 선원을 위한 지침서」를 통해 해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침서’는 해적우범해역에서의 해적피해 방지대책, 해적에 대비한 상황별 대비 전략을 밝히고 있다. ‘대응요령’은 ‘해적의 조기발견이 해적에 대한 최우선의 방어책’이라며, 미리 해적선을 발견하면 너울 및 파도를 일으

키는 회피조산으로 해적들의 승선 시도를 억제하는 방법이나, 해적이 습격을 감행할 때의 대응 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한 해적들의 공격은 새벽 1-6시 사이, 선원들이 잠들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MSC에서 제안하고 있는 「해적 및 무장강도 대응요령」에서와 같이 이러한 시간대에 선교에서 선박의 접근 여부 감시, 선수 및 선미에 추가감시요원 배치, 탐조등 사용, 선박 접근 경로 차단 등의 대응을 통해 해적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 선박과 한국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군 파병보다는 국가가 선주 및 선원들의 해적 대응 지침을 숙달하고,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2-2. 해군 파병으로 해적을 퇴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해군 활동이 일시적으로 해적 활동을 억제할 수는 있으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 미국을 비롯해 소말리아에 파병하고 있는 나라들은 해군력을 이용한 강력한 해적 단속 활동으로 소말리아 지역의 해적 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세계 20여 개국의 막강한 해군력이 집중된 아프리카 지역의 해적 피해는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09년 세계 각국의 해군

파병 이후 해적 발생이 감소 추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다.

- 2012년 1/4분기에 발생한 해적 피해 건수만도 64건으로, 최근 해적 발생이 눈의 띄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더구나 바람과 파도가 잦아드는 9-10월에 해적들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표 3] 최근 10년간 지역별 해적 및 무장강도 발생 현황(2012.4.1기준)

지역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4.1	합계
동남아	170	158	102	83	70	53	71	70	41	24	842
극동	19	15	20	5	10	11	0	44	15	3	142
인도	87	32	36	53	30	23	27	28	9	6	331
아프리카	93	73	80	61	120	189	268	259	191	64	1,398
기타	4	6	13	8	12	2	4	4	1	0	54
미상	0	0	0	6	0	0	0	0	0	0	6

※ 출처: 국토해양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 해적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외국 군대의 개입이 아니라 정치안정화가 필요하다

-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 아프리카 지역보다 해적 문제가 훨씬 심각했던 동남아시아 지역([표 4] 참조)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상당히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해양경찰 차원의 국제 공조와 함께 연안국의 정치, 경제적 안정화 등이 그 배경으로 평가된다. 이는 해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 2005년 해적 공격(미수 포함)이 79회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와 분리주의 운동 간의 평화협정 체결이 해적 발생 건수를 줄인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 군도 내외에서 일어난 공격들은 종종 분리주의 운동 그룹의 행위였는데, 평화협정 체결로 이들이 무장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 한편 인도네시아는 해적 행위와 테러리즘을 연결해 해양 안보를 증진하는 방식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는 주로 태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법어획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그 자원을 파괴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는 환경재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Catherine Zara Raymond, 『Piracy in the Waters of Southeast Asia』, 『Maritime Security in Southeast Asia』)
- 상승세를 유지하던 아프리카 지역의 해적 발생 건수가 2006년 주춤했던 것 역시 소말리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이 크게 작용했던 결과다.
- 소말리아의 이슬람법정연맹(Islamic Courts Union)이 2006년 6월 군벌을 몰아내고 수도 모가디슈를 장악하면서 내전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소말리아의 해적 행위도 주춤했다. 도둑질을 큰 범죄로 여기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슬람법정연맹은 자체 해상경비대를 구성해 해적 근거지를 소탕하기 시작했다. 모가디슈에서 약 500km 떨어진 하라데레를 비롯해 삼호 드림호가 피랍되어있던 호비요 등 동부 해안가 일대 해적들의 전초기지를 장악해나갔다.

※ 2006년 이슬람법정연맹의 대표 셰이크 하산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적질도 이슬람이 범죄로 금지하기 때문에 소말리아 땅에서 모두 몰아내

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그러던 2006년 12월,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를 침공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안정은 물거품이 되었고, 2008년 해적 행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해적 문제가 국가의 정치적 안정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표 4] 지역별 해적발생 건수

해역	'96	'97	'98	'99	'00	'01	'02	합계
동남아시아	124	92	89	161	242	153	153	1,014
극동	17	19	10	6	20	18	17	107
인도양	24	37	22	45	93	53	52	326
중남미	32	37	35	28	39	21	65	257
아프리카	25	46	41	55	68	85	78	398
기타	6	17	4	5	7	5	5	49
미상	0	0	1	0	0	0	0	1
전체	228	248	202	300	469	335	370	2,152

※ 출처: 정대율,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IMO 및 우리 정부의 노력」

- 소말리아 국가 경제가 해적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군사력에 의한 해적 소탕은 불가능하다
- UN 소말리아 감시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흐마드 소말리아 대통령이 직접 해적 우두머리인 모하메드 아프웨인에게 외교 여권을 발급해줬다고 한다. 외교 여권을 발급해줬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체포되지 않을 면책 특권을 부여한 것이다.

※ 아프웨인은 해적의 본거지 하라데레에서 해적들을 지휘하는 핵심 인물로, 잇

단 선박 납치 사건의 중심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6년 한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동원호 납치뿐 아니라 이후 한국 선박들의 납치를 주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소말리아 언론인 무스타파 하지는 “소말리아 정부가 해적과 연계돼 있는 것은 그들이 납치로 벌어들인 현금 때문”이며, “소말리아 정부의 돈줄은 오직 해적과 해외 원조금뿐”이라고 주장했다.
-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국제 원조금이 크게 줄면서 소말리아 정부의 해적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미 소말리아에서는 해적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 세력이 되었고, 인질 한 명의 평균 몸값이 소 1650마리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 해안선이 3,000km에 달하는 소말리아는 풍부한 어장을 갖췄고, 고기잡이가 주요 생계 수단이었다. 그러나 내전으로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 외국의 거대한 쌍끌이 선박들이 매년 3억 달러 이상의 해상 생물들을 싹쓸이 해갔다. 또한 불법 폐기물 투기도 계속됐다. 2005년에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가자 버려지고 파괴된 수백 개의 드럼통이 해변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3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사능 질병으로 사망했다.

※ UN의 소말리아 특사 아흐메두 아브달라는 “누군가 여기에 핵 물질을 버리고 있다. 카드뮴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도 있다”라고 말했다.

- 외국 선박들의 불법 조업과 폐기물 투기로 생계 수단을 빼앗기고 질병에 고통 받는 소말리아 사람들에게 해적 행위는 거의 유일하게 현금을 만질 수 있는 사업이다. 현실에 대한 절망, 외국에 대한 적개심 속에 소말리아 사람들은 오늘도 해적 사업에 뛰어 들고 있다.

- 이러한 현실 조건이 현재 산업화된 소말리아의 해적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않지만, 군사작전을 통한 해적 소탕이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2-3. 소말리아 파병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의 일환

- 소말리아 파병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더욱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다
- 한국 정부는 2011년 9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의안번호: 13240)을 제출하면서 청해부대의 임무 중 연합해군사의 해양 안보작전 참여를 처음으로 제시할 정도로 한국은 소말리아 파병을 통해 대테러 전쟁에 더욱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다.
 - ※ 정부는 소말리아 지역 파견부대의 임무를 △국제 해상 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연합해군사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 지원, △유사시 우리국민 보호로 제시했다.
- 상기 동의안에서 정부는 파병 연장의 근거로 유엔 안보리 결의 1373, 1838, 1846, 1851를 제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73호는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 28일에 테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결정한 결의안으로, 소말리아 파병이 대테러 전쟁의 일부로서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군 제독이 2010년 4월 21일부터 8월 31일

까지 CTF-151(Combined Maritime Forces' Combined Task Force 151)의 지휘관을 역임했다는 점을 선전하고 있다. CTF-151이 소속된 연합해군은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미국의 '항구적 자유 작전'(대테러 전쟁을 통칭하는 작전명)을 해상에서 추진하기 위해 2002년 10월 구성되었다. 연합해군은 이 중 '아프리카의 뿔 작전'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적퇴치,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불법무기 차단, 테러 근절이 주요 임무다. CTF-151 창설로 해적퇴치 임무를 이양한 CTF-150은 지금도 CTF-151과 동일한 지역에서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대테러 전쟁은 소말리아 안정의 기회를 파괴했다

-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소말리아를 주시해왔다. 장기간의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소말리아로 흘러들었다거나 소말리아 이슬람 진영과 헤즈볼라가 연계되어 있다, 이란 정부가 소말리아의 이슬람법정연맹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 미국 부시 대통령은 "소말리아가 알카에다의 도피처가 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 이슬람법정연맹이 모가디슈를 장악하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소말리아에 이웃한 에티오피아를 부추겨 전쟁을 일으켰다.

- 에티오피아의 소말리아 침공 이후 미국은 이후 미국은 보다 직접적으로 소말리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했다. 미국은 소말리아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최소 다섯 번의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

- 2007년 1월에 소말리아 남부 항구도시 키스마요에 대대적인 공습작전을 벌이면서 미군 당국은 알카에다 지도부 3인방을 겨냥한 작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소말리아로 확대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 미국은 소말리아를 제2의 아프가니스탄으로 만들고 있다

- 대테러 전쟁의 확대는 대테러 전쟁의 확대는 2006년 소말리아 정국 안정을 수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소말리아 안정의 기회를 파괴했다.
- 2008년 5월 1일 미국은 테러리스트를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소말리아 다사라렙 지역에 크루즈 미사일을 퍼부었다. 소말리아 과도정부와 반군 간의 평화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이 공격으로 30여 명의 소말리아인이 사망했다. 이 중에는 이슬람법정연맹의 소장파 그룹이 분화해 나온 ‘알 샤바브’(아랍어로 ‘젊은이’라는 뜻)의 전 간부인 에이든 하시 이로우가 포함되어 있었다. 알 샤바브는 미국 정부의 테러조직 명단에 올라있는데, 미국은 공격 후 원래 목표로 했던 테러리스트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평화회담은 수포로 돌아갔다. 알 샤바브가 보복 의지를 천명하면서 알 샤바브와 정부군, 에티오피아군은 모가디슈를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를 이어 갔다.
-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가 2008년 4월 펴낸 보고서는 ‘소말리아 이슬람주의 진영은 에티오피아의 침공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2006년 말에 비해 지지 기반도 대폭 넓어졌으며, 더욱 급진적 성향을 띠고

있다. 미국과 에티오피아의 목표와는 정반대로 소말리아 이슬람 진영의 테러 연계 가능성은 도리어 커졌다' 고 밝혔다.

- 미국의 파상공세에 파키스탄 국경지대까지 쫓겨 갔던 탈레반이 남부 헬만 드주를 중심으로 세력을 넓힌 것처럼, 모가디슈에서 쫓겨 갔던 이슬람법 정연맹은 소말리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정비해 다시 모가디슈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과 미국을 등에 업은 에티오피아의 침략과 점령이 소말리아 전역에서 저항 세력을 키웠기 때문이다.
-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해적도, 저항 세력의 성장도 막지 못한 채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미국과 동맹국들은 소말리아라는 늪에 빠져들고 있다.

2-4. 부적절한 파병의 근거

- 한국 정부는 2011년 9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의안번호: 13240)을 제출하면서 파병의 근거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73, 1838, 1846, 1851호를 제시했다.
- 결의안 1838호와 1846호, 1851호는 해적 소탕을 위해 소말리아 영해 진입 및 무력 사용, 영토 상륙작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영구적인 허용이 아니라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상기 결의안의 기한은 2009년 말까지다. 따라서 2011년 파견연장 동의안의 파병의 근거로서는 부적절하다.
- 물론 안보리 결의안 1897호(2009.11.30), 1950호(2010.11.23), 2020호

(2011.11.22)를 통해 그 기한이 12개월씩 연장되어 2012년 말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그러나 기한 연장의 근거는 소말리아 과도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소말리아 지역 일부에서만 통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도정부의 요청이 소말리아 전체 영해와 영토에서의 무력 사용의 근거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다.

※ 소말리아 과도정부는 2012년 8월 20일, 새 정부를 수립해 현재는 '소말리아 공화국'이 소말리아를 대표한다. 그러나 이슬람 부족의 세력권, 자치 지역인 소말리랜드, 군벌의 영향력 하에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치외/중립 지역 등 소말리아의 정치 상황은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다.

- 또한 반군 및 테러리스트 소탕을 빌미로 수차례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평화회담을 어렵게 만든 미국의 행위는 명백한 침략 행위다. 청해부대 및 개인단위 파병의 활동이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 1항에 위배된다.

[표 5] 소말리아 해적 관련 주요 UN 안보리 결의안

번호	채택일자	주요내용
1816	2008.6.2	△ 해적퇴치 위해 6개월간 외국 공권력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 무력 사용 허용 △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형사관할권 관련 국가간 협력
1838	2008.10.7	△ 소말리아에 인도적 지원 시급 △ UN 회원국들의 공군과 해군 동원 요청 △ 소말리아 과도정부와 협력 강조
1846	2008.12.2	△ 무력사용 결의안 1816에서 정한 영해 진입 기한을 추가로 12개월 연장 △ 소말리아 과도정부에 무기와 군사 장비 지원해줄 것을 요청

1851	2008.12.16	△ 소말리아 영토 상륙작전 가능성 인정 △ 소말리아 해적 관련 정보를 공유, 조정하기 위해 해적 정보센터 제안
1897	2009.11.30	△ 1846호와 1851호의 내용을 12개월 연장
1918	2010.4.27	△ 해적 관련 재판을 실시할 국내 또는 국제법정과 해적을 수감할 수 있는 시설 마련 방안을 3개월 내에 제출할 것을 UN 사무총장에 요청

2-5. 개인단위 파병의 문제점

○ 개인단위 파병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되어 있다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는 소말리아의 개인파병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2012년도 예산에는 개인파병을 위해 17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개인파병의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다.
- 국방부는 개인파병을 국회 동의 없이 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파병규모가 작고 안전에 위험이 없으며, 국제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 그러나 국회의 파병 동의권은 파병규모나 안전 등과 무관하게 모든 파병 활동에 대해 부여된 권한이므로 국방부가 임의로 국회 동의 없이 개인파병을 운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파병동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한 것이다.

[표 6] 개인파병 국가별 운영현황(단위: 명)

	국가/임무단	파병인원	
		2010	2011(8월 말 기준)
다국적군 파병	미국	3	3
	아프가니스탄	7	4
	바레인	3	5
	지부티	4	4
PKO 파병	인도/파키스탄	9	8
	네팔	4	0
	수단	9	8
	라이베리아	2	2
	코트디부아르	2	2
	서부사하라	2	4
	레바논	10	10
	아이티	2	2
	아비에이 평화유지군	0	1
합계		57	53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2011.10.

2-6. 부적절한 예산 운용

[표 7] 소말리아 파병부대 예산 (단위: 억 원)

연도	소말리아 청해부대
2009년	284
2010년	342
소계	626

※ 출처: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12.

○ 파병에 따른 비용 추계가 부적절하다

- 2011 회계연도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파병연장을 요청하면서 오히려 57% 증가한 파병활동 비용 추계를 제출했다.

[표 8] 2011 회계연도 소말리아 파병활동 결산 내역 (단위: 백만 원)

예산액 (예비비)	전년도 이월액	전용 (조정)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13 (21,236)	96	0 (-11)	0	21,335	21,161	17	156

※ 출처: 국방부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표 9] 2012년 소말리아 파병활동 비용 추계 (단위: 백만 원)

구분	해외파견 근무수당	증식/ 피복비	유류비	장비/ 물자 획득	기타 부대 운영비	계
비용	12,490	2,247	13,345	1,931	3,395	33,408

※ 출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13240)

○ 파병부대 예산은 국회 동의와 무관하게 임의로 이월되고 있다

- 국군부대의 해외 파병은 1년 단위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준 없이 예산이 이월되고 있다. 이는 국회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파병이 지속될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국회의 파병 동의 권한을 침해한다.

3. 결론

- 한국은 지난 2009년부터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청해부대의 선박 호송 임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생명은 계속 위협받고 있다. 더구나 공격적인 군사작전이 한국인의 생명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 해적 문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며,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 군대의 파병으로 해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해적 피해 통계를 보더라도 20여 개 국가의 해군 파견이 해적 문제를 줄였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소말리아 지역에 파병되어 있는 외국의 군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전쟁’을 도우면서 소말리아의 안정을 파괴해 소말리아를 제2의 아프가니스탄으로 만들고 있다.
- 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소말리아 해역보다 이른 1990년대부터 해적문제가 심각했던 동남아시아 지역은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수산 자원 보호 등의 경제적 안정화를 통해 최근 들어 상황이 상당히 호전되었다. 오랜 기간의 내전과 외국 상선의 불법 조업, 폐기물 투기로 파탄난 소말리아의 경제를 재건해 노동력을 흡수하는 것이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 단기적으로는 국제해사기구가 제안하는 ‘해적 행위 예방 및 억제 지침’에 따라 선사와 선박들이 미리 대비한다면 상당부분 해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군의 소말리아 해역 파병은 결코 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점점 더 깊숙이 말려들 뿐이다. 소말리아 파병은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UAE원전수주 백지화하고, 위험적 아크부대 철군하라!

1.UAE원전수주와 아크부대 파병 배경

- 1-1.중동정세
- 1-2.미국과 서방의 처지와 의도
- 1-3.UAE 처지와 의도
- 1-4.이명박 정부의 처지와 의도

2.UAE원전수주와 아크부대 파병 경과

3.파병 아크부대 현황과 정부의 평가

4.UAE원전수주와 아크부대 파병의 실체와 문제점

- 4-1.UAE원전사업은 미국의 핵관련 ‘이중 잣대’를 드러낸 사업이다
- 4-2.UAE원전사업은 중동평화를 저해하는 사업이다
- 4-3.UAE원전수주는 아크부대 파병을 끼워 팔기 한 사업이다
- 4-4.UAE원전수주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산물이다
- 4-5.UAE원전수주는 무리한 국내 정치 국면 전환용 사업이다
- 4-6.아크부대파병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파병이다

5.맺음말

UAE원전수주 백지화하고, 위헌적 아크부대 철군하라!

김환영 | 평화재향군인회

1. UAE원전수주와 아크부대 파병 배경

1-1. 중동정세

○ 2009년 2월27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10년 8월 이라크 전투작전 종료와 2011년 말 완전 철수 공언하면서 이라크 포기 아프간에 집중이라는 노선 확정하였고, 아프간 사태 악화로 2009년 말에 아프간에 3만 명의 병력증과 등으로 말해지 듯, 2009년 말의 중동 정세는 이라크전의 패배가 확인 된 시점이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중동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한쪽 날갯죽지를 잃고 곤두박질치고 있던 시점이었다.

1-2. 미국과 서방의 처지와 의도

-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는 미국의 TOP 10에 드는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가 파산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만이 아니라 서방의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왔다. 오바마는 2011년 내 이라크 완전 철군 계획을 2010년 10월 발표하면서 “이 전쟁들을 끝내면서 우리는 국내 경제를 살리고 우리 내부의 힘을 새롭게 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가 건설해야 할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라고 역설했으며, 미국은 2012년부터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에서 1조2천억 달러를 자동 삭감하고 이중 절반인 6천억 달러를 국방비에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의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처지임을 확인시켰다.
- 미국에 잠재적인 적대국가들 중, 핵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 핵을 가지려 하는 이란 등의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자신의 능력으로 대응하기에는 힘에 부치므로, 중동의 친미국가들의 능력을 이용하고자, 친미 국가들인 UAE뿐 아니라 이집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등도 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용인하는 것이며, 이는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에 ‘국가안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1-3. UAE 처지와 의도

- 중동에서의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패권이 약화된 시점에, 설상가상으로

2009년 11월26일 6백억 달러가량의 외채를 가진 두바이 국영회사 ‘두바이월드’가 채무 상환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면서, 급격히 수세에 몰린 UAE는 중동 내에서 반미, 반 서방 국가들에 의한 군사적 위협을 느끼게 됐고, 이 군사적 위협은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비대칭 무기인 핵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인 것이다.

- 이를 입증하는 것은 데니스 로스 전 백악관 중동담당 특별보좌관이 2012년 5월 29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중동관련 신간 출판 기념회에서, 2009년 4월 UAE와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 협력이사회)의 6개 회원국 중 하나이자,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 사우디의 압둘라 국왕이 자신과의 면담에서 “그들(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핵관련 기술이 다급해졌고, 이를 획득하기 위해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인 UAE에서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한 상황에서의 원전 건설은, 반미국가들을 또다시 자극하는 것이고, 군사적 대결 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황에서, 2007년 10월 이스라엘이 시리아 핵시설 공사 현장을 폭격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만약 군대까지 파견해서 공사경비도 서고, 유사시 지원군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1-4. 이명박 정부의 처지와 의도

- 지난 2009년 12월 27일 이명박 정권이 한 달도 안돼서 200만 달러 정도로 밝혀졌지만, 400만 달러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요란했다. 2008년, 집권 1년은 광우병사태로 허비하고(?) 2009년은 정권의 명운이 달린 대운하사업을 포장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낮은 지지율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정국을 돌파할 대형 이벤트가 절실한 시점이었다. 이를 돌파할 이벤트로 UAE원전수주를 십분 활용하였다. 실제로 지지율은 급등하고 죽어가던 4대강사업은 기사회생하였다. 원전사업의 사업성은 애초에 염두에 없었으며, 군대의 위헌적 파병 역시 고려할 겨를이 없었다.

2. UAE원전수주와 아크부대 파병 경과

- 2009년 12월27일 UAE원전 수주발표 이후 대주단 구성에 계속 난황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다.
- 2010년 12월 아크부대 파병안 날치기 통과되고 2011년 1월에 파병이 이루어졌다.
- 2011년 1월 29일 아덴만 여명작전후 생포해적 UAE군과 연합 호송작전 수행하였다.
- 2011년 3월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시마 1호기가 폭발했는데에도, 아

랍에미리트(UAE) 핵 발전 기공식에 참가했다. 그 자리에서 “핵 발전의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 핵 발전이 최고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형 핵 발전이 중동지역에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일본 민중에게 닥친 핵 재앙을 핵 발전 수출 마케팅에 이용했다.

- 2012년 2월 12일 아크부대 소속 특전사 부사관이 부대를 이탈했다가 약 18시간 만에 부대 주둔지인 알 아인의 한 쇼핑몰 일대에서 부대원에 의해 검거됐다.
- 2012년 6월 3일 UAE 원전사업에 대해 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은 UAE 정부와 협상을 통해 금융 지원 방식을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코퍼레이트 파이낸싱(CP·기업금융방식)으로 변경하여서, 금융 지원 금융사들이 PF로 했을 때 가동여부에 대한 의문으로 지원을 꺼리는 것을 UAE정부의 보증이 가능한 CP로 변경하여, 금융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개략적인 대주단 구성이 겨우 2년 반 만에 이루어 졌다. 수출입은행이 약 100억 달러를 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미국 수출입은행 등이 대출하는 구조이며, 대주단이 대출하는 규모는 총 17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며, 당초 대주단 참여에 부정적이었던 미국 수출입은행은 원전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일부를 미국 기업에서 납품받는다는 조건으로 이번 대주단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수출입은행은 최근 대주단 구성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대출을 직접 실행하기에 앞서 금융위원회에 특별한도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

해 수출입은행 자기자본 대비 4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자기자본이 8조원 수준인 수은이 100억 달러(약 11조원)를 대출해줄 수 없는 구조이므로, 수은은 금융위원회에 대출 한도에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 2012년 6월 15일 한국전력(사장 김중겸)는 전력그룹사 및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보조기기 공급업체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UAE 원전 성공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2012년 7월 18일에야 UAE 원전 건설심사 통과 하여 본 공사 착공이 되었으나 2012년 9월 초 현시점에서 아직 수출입은행의 금감원에 대한 100억 달러 규모의 초과대출 승인이 통과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서둘러 착공을 하고 있다.

3. 파병 아크부대 현황과 정부의 평가

인원	150명
주둔지	알 아인
예산사용액*	2011예산:10,915백만원 2012예산: 6,968백만원

*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2011.11)

- 해외 파병부대 평가단(2012.6.16-6.23)의 아크부대 관련 발표

내용

- 평가단장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의 평가¹⁾

“UAE군도 우리 특전부대와의 훈련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UAE 총참모부는 UAE에 주둔하고 있는 어느 선진국보다 한국군을 가장 신뢰하고 있으며, 한국군을 ‘원 팀(One Team)’ 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아크부대의 역량을 최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UAE군도 이제는 한국의 ‘정(情)’ 의 뜻을 알고 아크부대 이름처럼 한국군을 ‘형제’ 로 여기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크부대는 한-UAE 간 신뢰 구축의 상징이 되었고 양국 간 협력관계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UAE 총참모장인 하마드 장군이 서한을 통해 한국 아크부대의 역할과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파견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크부대로 인해 UAE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현격히 변화돼 대한민국의 위상이 업그레이드되었다고 교민들도 말씀하시더군요. UAE 여자대학의 정현애 교수는 “UAE 대학은 지금 ‘아크열풍’ 중”이라고 하면서 “파병 이후 대학 내 한국문화를 공유하는 동아리 ‘아리랑 클럽’ 회원 수가 최근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놀라더군요.”

“또 평가단이 총참모부를 방문해 고위 인사와 대담을 할 때 갑자기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우리 딸이 한국 문화 및 K-팝에 매료돼 한국어를 스스로 공부하고 있다’고 언급한 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 UAE 정부도 이런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UAE 대학생을 한국에 파견해 서로 문화를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 평가단 윤영미 평택대 교수의 평가 기고 일부²⁾

“필자는 최근 정부합동평가단원으로 아프가니스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1) 2012.07.16 국방부 홈페이지

2) 서울신문 2012.08.27일 30면

바레인 등을 파병부대의 현지 활동과 정세파악을 위해 방문했다.”

“UAE의 아크부대는 UAE 특전부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연합연습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UAE군의 정예화 및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이끌었다. 더불어 사막 및 고온의 환경에서 한국군의 전투수행 능력도 높아졌다.”

“PKO 활동의 참여는 군사외교이자 보은외교의 일환이며,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군은 더 활발하게 국가적 및 군사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한국군의 선진화와 국제화에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

- 2012년 7월 12일 국회 국방위에 국방부업무보고 중 일부 발췌³⁾

국제평화유지활동 중 해외파병부대 주요활동

③아크부대(UAE, ' 11.1월 파견, 현재 4진)

· UAE軍 특수부대 교육훈련지원, 연합훈련, 유사시 우리국민 보호

*연합훈련 : 12회(팀별 3~6주), 단독훈련 : 3회

· 아덴만 여명작전후 생포해적 UAE군과 연합 호송(' 11.1.29.~2.1.)

※기본임무 이외에도 방산협력·산업협력 등 국익 창출에 기여

4. UAE원전수주와 아크부대 파병의 실체와 문제점

4-1. UAE원전사업은 미국의 핵관련 ‘이중 잣대’를 드러낸 사

3) 국회 국방위에 국방부업무보고(2012.07.12)

업이다

- 이라크, 아프간 민중의 격렬한 저항으로 중동에서의 미국과 서방의 패권이 약화되는 시점에, 기존의 친미국가인 UAE가 이스라엘과 같이 적은 비용으로 군사적인 안보효과가 큰 핵관련 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이를 경제적인 국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서방이 용인한 사업이다. 그간 미국은 핵개발의혹만으로도 이라크를 침공하고, 이란의 핵개발의혹만 있어도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는 미국이 친미국가인 UAE에는 다른 잣대를 대서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4-2. UAE원전사업은 중동평화를 저해하는 사업이다

- 근본적으로 UAE원전은 대체에너지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미국가인 UAE가 핵 안보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이는 중동은 물론이고 인류사회의 영원인 핵 없는 사회로의 진입에 역행하는 사업이다.
- 이는 이란의 핵개발을 이유로 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친미국가의 핵무장은 문제의 해결방안이 아니며 인류 파멸적 상황으로 내모는 일이 될 수 있다. 문제의 해결방안은 중동의 분쟁의 원인인 이스라엘의 비핵화에 있고, 이스라엘과 중동 관련 국가의 평화협정에 있다.
- 지난 3월에는 바레인의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바레인 왕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우디군 1,000명,

UAE경찰 500명을 파병했다.

- 시위대는 외세 개입으로 보고 반대시위를 하고, 이란은 외국군대를 동원한 공포분위기 조성한다고 비난하고, 미국은 침략행위가 아니라면서 이를 두둔하고 있다. 정당한 민주화 요구를 외세가 개입하는 것이고 이를 아크부대가 지원하는 셈이 되고 있다. 중동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은 외국군대의 완전철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4-3. UAE원전수주는 아크부대 파병을 끼워 팔기 한 사업이다

- 원전수주 대가를 제외하고는 한국군과 UAE와의 군사적 협력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군사적 협력이라는 것은 양국의 이해가 분명해야한다. UAE 측의 이해는 분명하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과 서방의 참패가 중동의 사우디를 비롯한 UAE와 같은 친미, 친서방 국가들은 중동 내에서 안보의 위협을 느끼는 시점이다. 추가적인 군대를 양성하고 우방군대를 주둔시켜서 이를 저지하려는 것은 현재 친미국가들의 공통된 모습들이다.
- 한국군의 이익은 무엇인가? 우리가 유사시 UAE가 어떤 도움이 될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중동이 반미, 반서방 국가 중심으로, 반미, 반서방은 아니더라도 이슬람종교를 요체로 하는 자주적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중동의 주요한 국가들의 지원을 차단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군사적 이익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군사력을 외국

에 투입함으로써 국내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한 것이며, 유사시 중동의 주요한 군사력의 지원을 얻기 어렵게 하고 있으니 이는 군사적 이중 손실이다.

- 그러므로 이는 군사적 손실을 다른 국가적 이익으로 메우려한 것이다. 군사력을 이용한 장사! 우리가 그렇게 저주하는 제국주의 군대의 모습이다. 장사를 위해서 군대가 동원되어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들을 착취하여 부를 쌓으려했던 근대의 식민지 쟁탈전은 1,2차 대전으로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초래했는가?
- 지난 7월 12일 국회 국방위에 국방부업무보고에는 이를 자랑이라도 하듯이 주요활동에 ‘기본임무 이외에 방산협력, 산업협력 등 국익창출에 기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 지금 대한민국이 위협천만한 소제국주의 흉내를 내려고 한 것이다. 그것도 스스로의 힘이 아닌 침몰해가는 미국을 뒷배로 삼아서 하고 있는 비열한 짓이다.

4-4. UAE원전수주는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산물이다

- 지난 9월 3일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초청 강연에서, 세계 핵산업 동향보고서 대표 저자로 유럽의회를 비롯해 프랑스, 독일 정부 등에서 에너지 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 독일 출신 국제에너지

지정책 전문가인 마이클 슈나이더는, 전 세계가 ‘탈핵’을 모색하는 마당에 2030년까지 80개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한국이 국제적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한국 정부의 원전 수출 정책을 비판하면서, 또한 세계 핵 산업 후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를 후쿠시마 사태 이후 안전 조치 등 원전 건설비용 증가와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서 찾았다. 그 증거 중 하나로 UAE원전 자금조달문제가 3년이 지난 시점에도 해결되지 않는 점을 들었다.

-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선진국인 독일이 2022년까지 원전 철폐를 선언하였고, 일본도 40년 원전사용제한지침을 통과하여 여론으로 신규원전건설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2050년 정도면 원전철폐가 이루어진다고 하며, 사회적인 논의가 한창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원전사업도 재검토가 절실하고 이를 계기로 재생에너지산업으로 재편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당장 20여조원의 경제효과에 집착하지 말고 다가오는 시대의 경제상황에 대비하는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경제를 위한 길일 것이다.

4-5. UAE원전수주는 무리한 국내 정치 국면 전환용 사업이다

- 2009년은 이면박 정권의 명운이 달린 대운하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낮은 지지율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정국을 돌파할 대형 이벤트가 절실한 시점이었고, 이를 돌파할 이벤트 사업이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부패한 재벌과 민심을

없는 정권의 합작한 작품이었다. 최초 발표 시 400만 달러라고 발표한 수주 규모도 며칠이 가기 전에 탈로가 200만 달러 수준이고, 사업비 전액을 사업자가 금융 지원해야 하는 국면 전환용 사업이었다.

- 수주 이래로 나타나는 대주단 구성이 지연되고, 대주단의 PF를 포기하고 CP로 전환하는 등 사업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미국 수출입은행 등 미국 자본이 납품 권한을 제약하여 더욱더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금통위의 특별승인지연, 사업성공결의대회를 갖는 등 한전의 불안한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무리한 수주였다.
- 국민경제와 직결되지 않는 개별사업 수익성의 문제라면 시민사회가 나서서 콩 나라 팔 나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대규모 대출이 있고, 한전에 대한 정부 보증이 있으므로 UAE원전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부도가 나는 일이 발생하면, 대규모의 국민혈세인 공적자금투입이 불가피 하므로, 다시 한 번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수주철회 등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 국내 산업에도 좋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경영합리화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수주하려하지 않고, 군대 파병을 끼워 계약을 성사시키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수주를 하려하면, 단기적인 성과를 낼지 모르나,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국내 산업을 쪼먹는 일이 된다.

4-6. 아크부대파병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파병이다

- 2011년부터 국군의 해외파병에 새로운 항목이 생겼다. 그간은 유엔 PKO, 다국적군의 평화활동에 국방협력이라는 항목으로 UAE파병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의 근거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이는 현행 헌법상 ‘국토방위와 국가안보’의 군사력 건설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반 헌법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 현행 헌법은 분명히 국군의 건설 이유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5조 2항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되어 있다.
- 이는 명시적인 헌법이 지정한 대한민국의 군대 건설 이유이다. 이를 벗어난 군대의 사용은 헌법적 합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 먼저 UAE군과의 교육훈련지원, 연합훈련은 UAE정부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군사를 건설한 것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위헌적 군대 운용이다. 유사시 우리국민보호 역시 외국에서는 외국의 경찰이 국내에서는 국내경찰의 임무이다. 이 역시 위헌적 군대운용이다. UAE군과의 연합 호송작전, 이는 2010년 12월 8일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언제 UAE와의 연합작전을 위한 파병을 허락했는가?
- 마지막의 소위 당구장 표시로 된 ‘기본임무 이외에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폭로하는 자료이다. 대한민국은 군대를 동원해서 산업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좋은 말로 소제국주의고, 조폭국가라는 것

을 폭로한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혐오하던 일본제국주의 군대를 흉내 내고 있는 것이다. 일제의 말로가 핵폭탄이었음을 기억해야한다. 인류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어리석은 짓거리를 당장 멈추어라!

- 어느 것 하나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한 것이 없는 헌법을 뛰어넘는 위헌적 행위이다. 국군의 위헌적인 운용은 당장 중지되어야한다.
- 국민적 합의, 헌법적 합의 없는 군대운용은 군대 자체에 큰 타격을 준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군대가 된다. 이는 진짜 외세의 군사적 위협 앞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불행한 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맺음 말

- 지금껏 파병반대, 파병부대 철군의 이유는 침략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베트남, 아프간, 이라크 등이 이런 것들이었다. 새로운 형태의 파병이, 군사력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UAE파병이다. 국내적으로도 문제가 되었지만 공병부대를 동원해서 4대강을 파헤친 말도 안 되는 이명박 정부의 군사력운용의 위헌적 운용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이다.
- UAE의 원전추진 자체가 UAE의 장래나 중동평화나 세계평화에 적절한 사업이 아니다. 한국의 UAE 원전 수주는 수주 자체가 무리한 것으로 기초

적인 수익성 자체가 의심받는 부실한 사업으로 대주단 설립 자체가 아직도 불투명한 사업이다. 이명박 새누리당의 정권 안보차원의 분석이 아니라 진정 국익을 위하여,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수주 반납을 선언하라!

- 가서 본 장소는 PKO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아프가니스탄(다국적 군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군사적 협력단일군대), 바레인(청해부대, 다국적 군대)인데, 기고는 국군의 PKO활동이라고 말하는 교수가 포함된, 말도 안 되는 평가단의 평가이지만, 정부의 평가대로 한국의 정을 알리고, 케이팝 열풍을 만들고, 아리랑 동아리를 만드는 성과를 내려면 국고를 100여 억을 써가며 군대를 보낼 것이 아니라, 강남스타일의 싸이를 보내면 ‘싸이 열풍’ 이 불지 않을까? 공연 수입도 올려서 이 모든 효과를 내는 일이 있는데, 왜 군이 헌법적 합의를 뛰어넘는 위헌적이고, 이종의 군사손실을 초래하고, 중동평화를 해치는 국군을 보내는 것인가?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는 당장 철군되어야하고, UAE 원전수주 국회 청문회를 열어 원전수주가 사업적 타당성이 있는지, 아크부대 파병의 위헌적 행위를 밝혀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추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병요건 강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비책이 논의되어야한다.

아이티

(단비부대)

국군 해외파병연장에 관한 이슈 페이퍼-아이티 단비부대

1. 파병현황

- 1-1. 아이티 단비부대
- 1-2. 유엔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MINUSTAH) 전체 현황
- 1-3. 아이티 단비부대 파병 절차

2. 아이티 파병의 문제점

- 2-1. 민주주의 회복의 실패와 정치적 편향성
- 2-2. 파병과 주둔의 당위성부족
- 2-3. 반정부 세력과 그 지지자들에게 대한 폭력적인 대응
- 2-4. 유엔 평화유지군에 의한 인권침해
- 2-5. 아이티 국민들의 반감

3. 예산

4. 결론

국군 해외파병연장에 관한 이슈 페이퍼

-아이티 단비부대

최재훈 | 경계를넘어

1. 파병현황

1-1. 아이티 단비부대¹⁾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08호(2010년 1월 19일)」를 기초로 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아이티안정화임무단 파견 동의안(2010년 2월 9일)」에 근거해 2월 10일 30명의 선발대가 맨 처음 아이티 현지로 출국하였다.
- 그 때 이래로 현재까지 240명의 상시인원이 6개월 단위로 인원을 교대하며 아이티 수도 포르투프랑스 서쪽 레오간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MINUSTAH)의 참모장교로 2명이 2009년 11월 11일부터 별도로 파견되어 있다.

1) 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내 '세계 속의 한국군' 참조.

- 사업 추진 실적 : 잔해제거 13개소, 도로복구 16개소, 하천준설 15개소, 심정개발 13개소, 부지정리 41개소, 대민의료지원 3만명²⁾

1-2. 유엔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MINUSTAH) 전체 현황³⁾

- 2004년 4월 30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24호에 근거해 6,700명의 군 병력과 1,622명의 경찰 병력, 그리고 민간인 702명이 파병된 것이 아이티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시작이었다.
- 2012년 7월 31일 기준으로 군인 7,297명 / 경찰 2,795명 / 국제 민간요원 529명 / 현지 민간요원 1,342명 / 유엔 자원인력 193명이 아이티에 주둔하고 있다. (군 병력 파견국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에콰도르, 프랑스,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일본, 요르단, 네팔,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한국, 스리랑카, 미국, 우루과이 등 19개국)
- 현재 전체 MINUSTAH를 이끌고 있는 단장은 칠레의 마리아노 페르난데스 아무나테기(Mariano Fernandez Amunategui), 군사 부문 총 지휘는 브라질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굴라르트(Fernando Rodrigues Goulart)가 맡고 있다.

2) 출처 : 국방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2012년 8월)

3) 출처 : <http://www.un.org/en/peacekeeping/missions/minustah/facts.shtml>

1-3. 아이티 단비부대 파병 경과

2010.1.12	아이티 수도 포르투프랑스 남서쪽 15킬로미터 지점에서 대지진 발생
2010.1.21	유엔, 각 회원국들에게 평화유지군 병력파견 요청
2010.1.28	국방부 내 파병준비단 소집
2010.2.2	파병안 국무회의 의결
2010.2.8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결
2010.2.9	파병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0.2.10	1차 선발대 인원 30명 출국
2010.2.27	본대 190명 출국

2. 아이티 파병의 문제점

- 앞서 1-2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아이티에 처음으로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견된 것은 흔히 알고 있듯이 2010년 1월 12일 수도 포르투프랑스에서 서쪽으로 25킬로미터 떨어진 레오간(현 단비부대 주둔지)에서 진도 7.0의 대지진이 일어난 뒤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는 2004년 2월에 일어난 반정부 쿠데타로 인해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Jean-Bertrand Aristide) 당시 민선 대통령이 강제로 '납치' 된 뒤에 예상되는 해당 국가와 지역의 혼란과 폭력사태를 예방하고 치안을 회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최초로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이하 MINUSTAH)이란 명칭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견된 것이며, 2010년 1월 대지진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둔하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 따라서 대지진 이후에 한국 정부

가 파병한 아이티 단비부대에 대한 평가 역시도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아이티 유엔 평화유지군의 주둔과 임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다시 말해, 단비부대 파병의 정당성과 주둔 연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이티 유엔 평화유지군 전체에 대한 평가는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부터는 아이티에 주둔하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다.

2-1. 민주주의 회복의 실패와 정치적 편향성

-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 전 대통령은 아이티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빈민들의 지지를 토대로 해서 ‘라발라스 가족(Fanmi Lavalas)’ 당의 후보로 1990년 처음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 일어난 군부 쿠데타로 망명길에 오른 그는 1994년 8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940호⁴⁾에 근거해 30개 국 약 2만 2천여 명의 다국적군이 아이티를 공격하여 쿠데타 세력을 축출한 덕분에 다시 권력에 복귀했다. 그리고 그 뒤 1996년에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했다가 다시 2000년 11월 대선에 출마해 91.8%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맞게 된다.
- 그러나 과거 군부 출신들과 엘리트, 그리고 기업 소유주들로 구성된 야당과 반대파는 조직적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2001년에 집권한 미국의 부시 정부도 그런 주장에 적극 동조해

4) <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N94/312/22/PDF/N9431222.pdf?OpenElement>

아이티에 대해 가혹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에 강하게 압력을 넣어 5억 달러 규모의 경제원조와 차관 제공을 중단시켜 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아이티에게 이러한 조치는 크나큰 압력으로 다가왔고, 국민들은 엄청난 생필품 부족과 경제난에 고통 받아야 했다.

불법적 쿠데타와 대통령의 강제 축출

- 그러던 2004년 2월, 기 필리페(Guy Philippe) 전 경찰서장이 이끄는 반군 세력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수도를 향해 진격해 오는 와중에 아리스티드 대통령의 전격적인 사임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 당시 미국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한 언론 보도에서는 아리스티드 당시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 측에 자진 사임과 망명을 요청해 미국 정부가 제공한 헬기를 타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거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아리스티드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사태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그가 미국정부 요원들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퇴서에 서명한 뒤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져 망명지로 보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그가 자진 사임했다는 2월 29일의 바로 전날까지도 그가 사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소수의 엘리트 계층과 반군 세력을 제외한 국민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이 정황상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 미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를 비롯해 많은 관련된 이들과 노엄 촘스키(Noam Chomsky)와 같은 학자들, 인권단체들도 여러 객관적인 근거들

을 토대로 아리스티드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⁵⁾

- 그렇다면, 상식에 기초해 볼 때 아이티 평화유지군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어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유엔 평화유지군에게 주어진 역할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라는데 동의한다면, 당연히 아이티 국민들의 자결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했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에 의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된 아리스티드 대통령이 외세와 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해 강제로 쫓겨났던 비정상적이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상황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것, 즉 대통령의 조속한 귀국을 도움으로써 그가 무사히 남은 임기를 마치고 1996년에 그랬던 것처럼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혼란과 폭력을 진정시키는 것이 바로 유엔 평화유지군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유엔 평화유지군은 파병 당시부터 아리스티드의 축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오히려 아리스티드의 귀국 자체를 내내 막는 역할을 해왔다.⁶⁾ 불법적인 쿠데타를 용인해준 셈인 것이다.⁷⁾

아이티 국민들의 민의를 무시한 유엔의 정치적 편향성

- 유엔의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은 그 이후로도 계속 논란거리가 되어 왔으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10년 11월 28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검

5) 참고자료: Getting Haiti Right This Time, Noam Chomsky 외, 2004년

6) 아리스티드는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18일 망명지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 아이티로 돌아왔고, 공항에는 그의 귀국을 환영하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7) “르완다와 아이티 사태를 통해 본 유엔 개입의 모순과 문제점,” 최재훈, 전남대 법학연구소 인권법평론 창간호(2007년 12월)에서 발췌

총선이었다. 당시 선거는 특히 대지진으로 인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국토와 국민들의 삶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선거였다. 그런데 아이티의 임시선거위원회(CEP)는 가장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던 라발라스 가족 당(아리스티드가 이끌었던 정당) 후보들과 여타 정당의 후보들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나 이유도 없이 입후보 자격을 박탈해버렸다. 그로 인해 상당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사실상 투표에서 배제된 것이다) 유례없이 낮은 투표율(전체 등록 유권자의 27%)을 기록한 가운데 수많은 선거 부정과 폭력으로 얼룩졌다. 이를 지켜본 미국 하원의 ‘외교정책 및 국제문제에 관한 흑인 대책위원회(Black Caucus Task Force on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Affairs)’를 비롯해 여러 다양한 해외감시단들은 투표의 공정성과 대표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⁸⁾

- 그런데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42호에 명시된 아이티 유엔 평화유지군의 임무 가운데는 “헌법 및 정치 절차를 지원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지사체 및 의회, 대통령 선거를 조직하고 감시하며 실행에 옮기는 것을 돕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아이티 유엔 평화유지군은 막상 눈앞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선거부정과 특정정치세력의 의도적인 선거참여 배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았다.⁹⁾ 오히려 당시 유엔 평화유지활동 전

8) “Sunday’s Presidential Election in Haiti was Rife with Problems,” CBC 방송, 2010년 10월 28일

Congressional Black Caucus Task Force on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Affairs
Statement on Haiti Elections & OAS Report, Congressional Black Caucus 보도자료, 2011년 2월 1일

9) Jake Johnston and Mark Weisbrot, “Haiti’s Fatally Flawed Election”, Center for

체를 총괄하던 MINUSTAH의 에드몬드 몰렛(Edmond Mulet) 단장은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아주 다양한 후보들이 출마했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¹⁰⁾

- 이는 그동안 아이티 유엔 평화유지군이 아리스티드 전 대통령과 라발라스 가족 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 빈민층 거주지역에 대해 강력히 탄압하고 단속해왔던 것과 더불어 그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 핵심 원칙인 ‘분쟁당사국(자)의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중립성, 특정 참여국이 파견 중 해당 정부의 정책 반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대표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2-2. 파병과 주둔의 당위성 부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티의 유엔 평화유지군 주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과거엔 그렇다 치더라도 대지진 이후에 벌어진 무정부 상태의 혼란과 약탈을 잠재우고 지진 피해자들의 긴급 구조와 구호, 그리고 그 이후의 재건 노력을 위해서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추가 파병과 주둔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이해당사국 정부들과 언론에 의해 각인된 그런 인식은 오랫동안 현지에서 활동해온 언론인들과 현지 활동가들이 전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2011

10) Joseph Guyler Delva, “US Lawmakers Warn of Flaws in Haiti Vote Process,” 로이터통신, 2010년 10월 8일

하는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되짚어봄으로써 유엔 평화유지군의 신속한 추가 파병과 주둔이 과연 불가피했는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다.

- 먼저, 아이티에서 강도 7.0의 대지진이 일어났다. 수십만 명이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리고 살아남은 수백만 명은 집도, 물도, 식량도,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공황상태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흥분한 아이티 민중들이 순식간에 폭도로 돌변해서 닥치는 대로 약탈을 시작했을까?

- 이에 관해서는 우선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보겠다. “그들이 등에 지고 있는 짐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나흘 동안 굶은 상태에서 피약별 아래 시체와 뒤섞여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다는 걸 고려하면, 이들은 아주 훌륭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이티인들은 놀라운 국민들입니다. 그렇게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진 것 모두를 잃고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요?”¹¹⁾ 그 다음으로는 현지 병원의 한 외국인 의사가 전한 말도 귀담아 들을 만 하다. “(군인들이) 통제해서 환자들이 병원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밤늦게 돌아다니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엔 치안이 불안하지는 않아요...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유일한 위기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 없어요.”¹²⁾ 이 밖에도 아이티와 그 국민들

11) 영국 BBC 라디오, 2010년 1월 18일

12) 데모크라시 나우(www.democracynow.org), 1월 20일자

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참사 초기부터 상황을 지켜봐온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지진 이후에 일어난 약탈과 혼란의 진실

- 그렇다면, 우리가 언론에서 접했던 광경, 즉 구호품 식량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주먹과 칼을 휘두르며 싸우고 상점을 터는 ‘폭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상황을 다시 종합해보면 이렇다.
- 지진 뒤의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아이티인들은 “아이티 전역에서 스스로 주민위원회를 조직해 (현장을) 수습하고 잔해에서 시신들을 꺼낸 뒤 난민 캠프를 설치하는 등 치안을 확보하는 모습”¹³⁾을 보여주었다. 대다수 사람들은 외부에서 전해지는 구호품과 의료진은 구경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일주일 넘게 버텼다. 그러나 애타게 기다리던 도움의 손길은 소식이 없고 그 대신 미군이 공항을 장악해 그 곳에 작전본부를 차리고 생똥맞게 대통령궁을 ‘장악’했다는 소식만 들려온다. 뿐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는 한시가 급한 마당에 구호품과 의약품을 가득 실은 세계식량프로그램(WFP)과 국경없는의사회(MSF)의 수송기들은 미군들을 실어 나르는 수송기의 이착륙 때문에 착륙이 거부돼 이웃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기수를 돌려야했다¹⁴⁾는 이야기도 분명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것이다. 그나마 운이 좋은 사람들은 간간히 헬리콥터에서 떨어뜨려주는 빵과 물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고마움과 안도감보다는 인간적인 모멸감으로

13) 현지 언론인 <아이티 리베르테(Haiti Liberte)의 킴 아이브(Kim Ives)의 전언

14) 뉴욕 타임스, 2010년 1월 17일/ 영국 텔레그래프, 2010년 1월 20일

인한 분노만 키울 뿐이다. “우리는 그들이 던져주는 뼈다귀를 받아먹는 게 가 아니”¹⁵⁾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점점 사람들의 인내심과 체력은 바다를 드러내고, 자신과 굶주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물과 음식을 찾아서 거리의 상점들을 뒤지기 시작한다. 이미 그 곳에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구호보다는 공식적으로 ‘치안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미군과 유엔 평화유지군들이 총으로 무장한 채 상점과 주요 건물들을 지키고 있다. 아, 저들은 우리의 생명보다는 가진 자들의 재산을 지키러 왔구나’ 하는 배신감이 일면서 그 때부터는 각자 알아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 경쟁이 시작된다.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들고 달리는 사람들, 그걸 빼앗는 사람들, 그리고 곤봉을 휘두르고 공포탄을 쏘며 그들을 위협하거나 체포하는 군인들, 그걸 취재하는 외국 기자들, 그리고 그들이 전해온 기사를 읽는 우리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실이라 믿었던 지진 직후 아이티의 이른바 약탈과 폭력, 혼란의 진실인 것이다.¹⁶⁾

- 그리고 이러한 혼란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티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자체적인 질서 회복을 위해 애쓰고 긴급한 물자를 스스로 분배하는 배급 체계를 세워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 구호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 대표들은 어쩔 수 없이 도심의 상점에 있는 분유와 생수들을 실어와 나눠줄 수밖에 없었고, 외부 언론들은 이러한 노력 또한 ‘약탈’로 묘사했다.¹⁷⁾

15) 레오간의 한 주민, 데모크라시 나우, 2010년 1월 22일

16) “무지와 왜곡, 편견의 여진은 지진만큼이나 강하다”(최재훈, 민중의 소리 1월 27일자)에서 발췌

<http://www.vop.co.kr/A00000280279.html>

17)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데모크라시나우(www.democracynow.org) 방송 내

현지 지역사회의 역량을 활용했다면 대부분의 혼란은 막을 수 있었다

- 그 이후의 상황도 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 미국 국무부 외교안보국이 펴낸 2011년 3월 보고서에서는 “끝없이 계속되는 빈곤과 부족한 경찰력, 느슨한 총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들에서는 아이티의 살인률이 인근 카리브해나 라틴 아메리카의 상당수 국가들보다 더 낮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현재 아이티 유엔평화유지군을 이끌고 있는 브라질이 아이티보다도 살인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3배나 높다는 점이다.¹⁸⁾

[표 1] 국가별 살인 사건 비교(2010년, 단위; 명)

국가명	인구	살인 피해자 수	인구 10만 명 당 비율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110,000	66	60(세계 22위)
자메이카	2,600,000	1,428	54.9(세계 23위)
트리니다드 토바고	1,300,000	472	36.3(세계 24위)
브라질	189,953,000	50,113	26.38(세계 25위)
아이티	9,600,000	795	8.2(세계 26위)

- 이를 종합해보건대, 대지진 이후의 일시적 약탈과 혼란 상황은 외부 구호품 전달을 보다 신속히 하고 현지 주민 대표와 풀뿌리 조직을 잘 활용했다

용 종합

18) Overseas Security Advisory Council, Haiti 2011 Crime and Safety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Diplomatic Security, <https://www.osac.gov/Pages/ContentReportDetails.aspx?cid=10560>

라면 충분히 통제가 가능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치안 상황도 굳이 외국 군대를 대규모로 주둔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보다는 오히려 위에서 설명한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의 역사적인 맥락과 아래에서 설명할 문제점들로 인해 아이티의 유엔 평화유지군은 주민들의 불신과 그로인한 사회불안의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3. 반정부 세력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대응

- 아이티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되풀이되어 온 쿠데타와 외세의 개입, 높은 빈곤율과 빈부격차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시위가 심심찮게 일어난다. 그런데 2004년 이후 아리스티드 전 대통령의 강제 축출 이후 그의 복귀를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시위에 대해 유엔 평화유지군이 폭력적인 대응과 탄압을 가함으로써 상당수 시위가 중국에는 반외세, 반유엔 구호로 마무리되어 왔다. 그런데 대지진 이후에도 유엔 평화유지군은 치안질서 회복과 폭력단 소탕이라는 명분으로 무력진압을 계속함으로써 인해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이 그치지 않고 있다.
-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짚어보면, 지난 2005년 7월 6일 유엔군이 불법적인 폭력단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수도 포르투프랑스의 빈민 밀집지역인 시떼 솔레유에 장갑차를 앞세우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최소 23명에서 최대

50여 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¹⁹⁾

- 당시엔 쿠데타 이후 들어선 임시정부가 아리스티드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살인과 납치를 자행하자, 그에 맞선 아리스티드 지지자들은 시때 솔레유 빈민가를 거점으로 저항을 이어오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MINUSTAH는 무려 1,440명의 평화유지군과 41대의 장갑차를 동원해 지역을 봉쇄하고 공격을 가한 것이다.²⁰⁾ 이는 누가 봐도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진 주민들에 대한 유엔의 일방적인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6년 12월 22일에도 똑같은 양상의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발생해 최소 3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유엔 측은 사망자 모두가 무장한 폭도들이었다며 민간인 살해를 부인했지만, 주민들은 아리스티드 지지자들에 대한 표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²¹⁾ 그 외 2009년 6월에도 가톨릭 신부의 장례식에 모인 추모객들에게 브라질 출신 유엔군이 사격을 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²²⁾

19) "Sovereignty and Justice in Haiti," Darren Ell, http://www.haitiaction.net/News/HIP/2_18_7/2_18_7.html

"US Labor and Human Rights Delegation: Update on Cite Soleil Massacre," 2010년 1월 17일

20) http://www.coha.org/the-enforcers-minustah-and-the-culture-of-violence-in-port-au-prince/#_ftn24

21) "UN in Haiti accused of second massacre," Haitian Information Project, 2007년 2월,
<http://www.zmag.org/content/showarticle.cfm?SectionID=55&ItemID=12013>

22) "A funeral and a boycott: the struggle continues in Haiti," Kevin Pena, San Francisco Bay View, 2009년 6월 20일

- 대지진 이후에도 유엔 평화유지군의 폭력적인 탄압은 계속되었다. 20010년 5월 24일, 대통령궁 근처에 모여 정부를 규탄하고 MINUSTAH 단장의 해임을 요구하던 대학생 시위대에 유엔군이 최루탄과 고무탄환을 무차별적으로 발사해 어린 소녀가 얼굴에 고무탄환을 맞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²³⁾ 그로부터 5개월 뒤인 10월 15일에도 수도 포르투프랑스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주둔 연장에 반대하는 평화행진을 벌이던 약 2백 명의 시위대를 유엔군이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
-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임박한 물리적 폭력의 위협에 놓여있는 민간인들을 보호하고...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아이티 인권 기구와 단체들을...지원하며, 아이티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보고한다”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임무에 전적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2-4. 유엔 평화유지군에 의한 인권침해

- 정치적인 탄압과는 별개로,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 군인들에 의한 직접적인 인권침해 또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 2007년 11월, MINUSTAH 소속 스리랑카 평화유지군의 장교 3명과 사병 111명이 아이티 미성년 소녀들에게 돈을 주고 성매수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본국으로 소환 조치된 일이 있었다. 유엔군에 의한 이런 성범죄는 그 이

23) “Haiti-Politique: Manifestations anti-Preval et anti-Mulet,” Alterpresse, 2010.5.26
<http://www.alterpresse.org/spip.php?article9549>

전에도 종종 발생해 왔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아이티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를 조사했던 영국의 의학 저널 <랜싯(The Lancet)>은 유엔 평화유지군들이 살해 협박과 폭력까지 동원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고, <세이프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의 2008년 조사에서는 군인들이 보통 미화로 2달러 50센트를 주고 미성년자들의 성을 매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 가장 최근에 드러난 사례로는 지난 2011년 9월 우루과이 출신의 평화유지군들이 부대 막사 안에서 아이티 10대 소년을 집단 성추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했다가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던 사건을 들 수 있다. 사건의 파장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자 우루과이 국방부는 부대 책임자인 사령관과 5명의 군인을 본국으로 즉각 소환조치 했지만, 그들이 나중에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현재도 우루과이 군과 경찰을 합쳐서 약 1,100명의 인원이 여전히 아이티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주둔을 계속하고 있다.²⁴⁾

- 한 편, 이런 일도 있었다. 2010년 8월 17일, 제라르라는 16세 소년이 캅 아이티엔 지역에 주둔하던 MINUSTAH의 경찰부대 안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소년의 주검이 발견되기 전, 인근 호텔 직원들은 “저들이 내 목을 졸라요”라는 소년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정확한 사인과 가해자를 밝히기 위한 아이티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조사는

24) “Uruguay recalls troops over Haiti ‘sex abuse’,” 알 자지라, 2011년 9월 5일
<http://www.aljazeera.com/news/americas/2011/09/20119542855682385.html>

유엔 측의 강력한 반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심지어 유엔이 아이티 법원의 조사조차 가로막는 바람에 사건은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 있다.

- 이 외에도 평화유지군인 2명이 소지한 물품이 반입금지 되자 동료 군인들이 국제공항에 공포탄을 쏘며 난입한다든지 하는 각종 일탈 행위와 범죄들이 유엔 평화유지군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지만, 유엔 차원의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²⁵⁾

2-5. 아이티 국민들의 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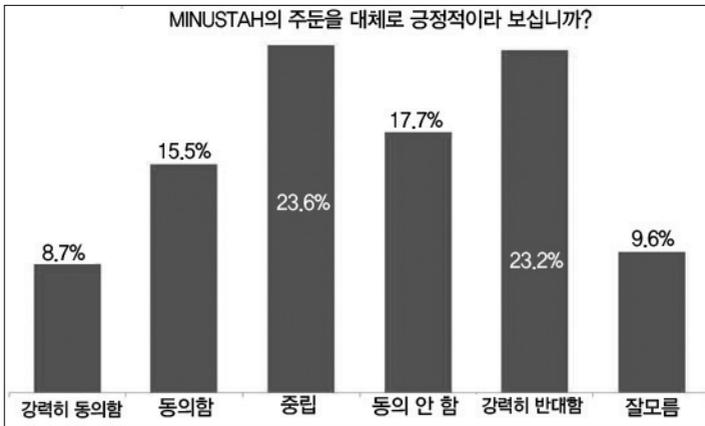
-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유엔 평화유지군을 바라보는 아이티 국민들의 시선은 대체로 차갑다. 특히나 그렇지 않아도 대지진으로 인해 공중보건 시스템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2010년 10월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 네팔 부대가 현지 주민들의 식수로 쓰이는 아르티보타이트 강에 다 더러운 오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바람에 아이티에 콜레라가 창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반감은 극에 달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콜레라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전혀 없었던 콜레라 청정국가 아이티에서 작년 하반기에만 무려 약 50만 명이 감염되고 그 중 4천 명 이상이 사망했기 때

25) “Armed MINUSTAH soldiers break into Toussaint Louverture Airport, shots fired”(2011.6.)을 인용한 “MINUSTAH: Keeping the peace, or conspiring against it?”(하버드 공중보건스쿨, 2011.10.)에서 재인용.

문이다.²⁶⁾

- 이런 국민들의 정서는 수도 포르투프랑스 곳곳에 낙서된 “A bas Kolera, a bas Minista(콜레라는 물리가라, MINUSTAH도 물리가라)”라는 문구²⁷⁾와, 올 2012년 2월 유엔 평화유지군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안보리 대표단이 아이티를 방문했을 당시 나라 곳곳에서 반유엔 시위가 벌어졌던 사실²⁸⁾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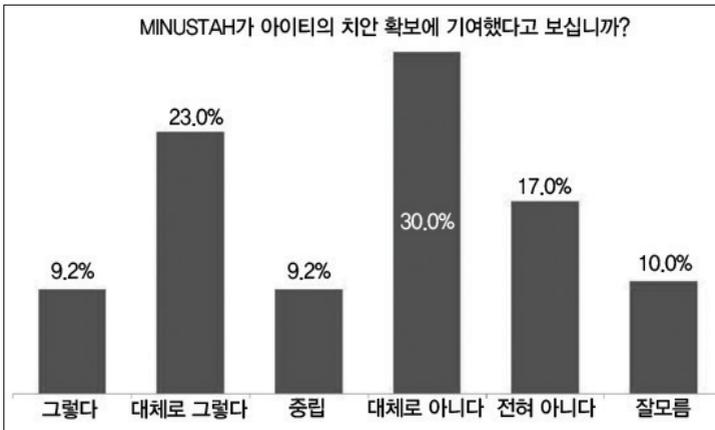
26) “5,000 Haitian cholera victims sue U.N. after deadly epidemic kills 6,000, sickens 450,000,” 데모크라시 나우, 2011년 11월 8일
http://www.democracynow.org/2011/11/8/exclusive_5_000_haitian_cholera_victims

27) <http://blogs.aljazeera.com/blog/americas/un-peacekeepers-not-about-leave-haiti>

28) “Time for UN Peacekeepers to Rethink their Role in Haiti,” Americas Quarterly, 2012년 2월 21일, <http://www.americasquarterly.org/node/3358>

- 물론 간접적인 추정이 아닌 구체적인 연구 결과도 여럿이 나와 있다. 그 중 2011년 8월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요크 칼리지와 아이티 국립대학교가 수도 포르투프랑스의 저소득층 및 중산층 지역과 난민촌 거주자들 약 800여 명을 표본으로 공동실시한 조사만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조사 대상자 중 유엔 평화유지군의 주둔에 ‘강력히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8.7%,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15.5%로, 둘을 합치면 유엔군 주둔에 동의하는 비율이 전체의 4분의 1 미만인 24.2%에 불과했다. 그에 비해, 주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17.7%, ‘강력히 반대한다’는 23.2%로 둘을 합쳐서 40.9%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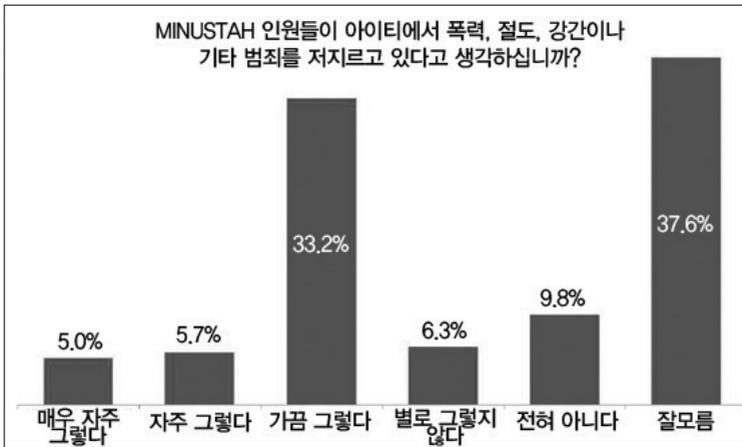
[그래프 2]



- 마찬가지로, 유엔 평화유지군이 아이티의 치안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30.0%가 ‘대체로 아니다’, 17.0%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해, 절반에 가까운 47%의 응답자들이 유엔군의 치안 확보 성과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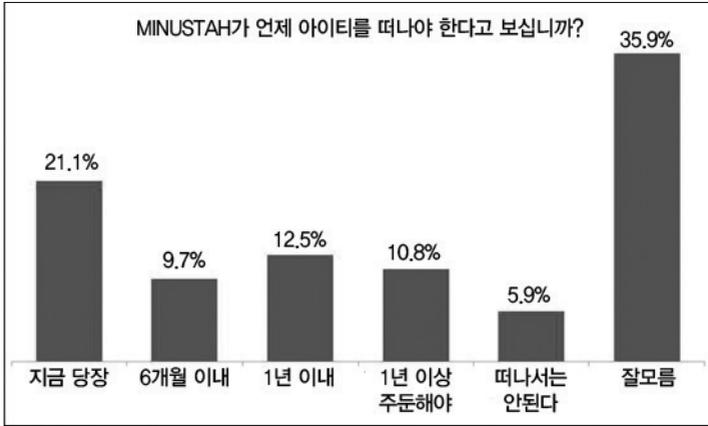
- 해당 조사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유엔 평화유지군 인원들의 주둔 행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었다. 유엔 평화유지군 인원들이 폭력, 절도, 강간이나 기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33.2%의 응답자가 ‘가끔 그렇다’고 대답했고, 5.7%가 ‘자주 그렇다’, 5.0%가 ‘매우 자주 그렇다’고 답해, 모두 합쳐 43.9%의 응답자들이 유엔군이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프 3]



- 마지막으로, 유엔 평화유지군의 철군 시점에 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21.1%가 ‘지금 당장’, 9.7%가 ‘6개월 이내’, 12.5%가 ‘1년 이내’라고 응답해, 전체 43.3%의 응답자가 1년 이내에 유엔군이 아이티에서 철군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프 4]



- 이와 같이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한 아이티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은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유엔 스스로도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분쟁 당사국(자)의 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동의성의 원칙을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기본 전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2004년 최초 파병부터 최근 2010년 파병까지 모두 아이티 정부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아이티 파병이 동의성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2004년에 처음으로 평화유지군 파병을 받아들인 건 바로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쿠데타 세력이었으며, 2010년 대지진 당시에는 르네 프레발 정부가 사실상 정부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 그렇기에 향후 유엔 평화유지군의 계속 주둔이나 철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라도 아이티 국민들의 여론을 경청하고 그것을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계

속적인 주둔은 상당부분 정당성과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3. 예산

[표 2] 2012년도 3개 부대 파병연장에 따른 소요액(단위: 명, 백만 원)²⁹⁾

2011		2012		증감	
인원	예산현액	인원	소요액	인원	금액
240	14,846	240	14,844	-	△2

[표 2] 2011회계연도 결산 내역 (단위; 백만 원)³⁰⁾

예산액 (예비비)	전년도 이월액	전용 (조정)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9,754)	4,062	0(8)	-	13,824	10,669	570	2,585

- 지금까지 해마다 아이티 단비부대 예산은 파병연장동의안이 예산안 편성 이후에 처리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되는 형식이였다. 따라서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결산에 대해서만 국방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됐다.
- 한편, 유엔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병력 공여국에 대해 활동경비를 보전해주고 있으나, 아이티 단비부대의 경비보전비율은 11.56%에 불

29) 출처: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30) 출처: 국방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과해 217.3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³¹⁾

- 가장 근본적으로, 유엔은 아이티 평화유지군 주둔 비용으로 하루 약 2백만 달러, 일 년에 약 8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 막대한 자금을 군대의 주둔에 쓰기보다는 직접적인 재건과 난민 지원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4. 결론

- 아이티는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 비록 쿠데타와 대지진으로 인해 민주주의 회복과 난민구호, 국가 재건이라는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정부가 존재하고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역량이 주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 나라이다. 그러한 나라에 연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다수 국민들의 반대와 점령군이라는 오명을 무릅쓴 채 굳이 외국 군대가 주둔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질서 회복과 치안 유지, 난민지원과 재건은 군대의 파병과 주둔보다는 현지 정부의 역할과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그리고 민간 구호단체들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다.
- 국군 단비부대의 주둔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단비부대가 현지에서 하는 활동들이 도로 건설과 의료 지원과 같은 재건과 대민지원 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단비 부대 역시도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파견

31) 2011년 10월 11일자, 월요신문

되고 주둔하는 이상 유엔 아이티 평화유지군의 전체적인 역할과 그에 대한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유엔 아이티 평화유지군은 그 정치적 편향성과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 현지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군 단비부대를 비롯한 유엔 평화유지군 전체가 하루속히 아이티에서 철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들을 아이티의 민주주의와 주권 회복, 자체적인 재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오쉬노부대)

오쉬노부대, 아프가니스탄 파병의 진실

1.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현황
 - 1-1. 파병 부대 현황
 - 1-2. 아프가니스탄 전황
2. 파병 임무와 성격에 대한 분석(파병의 정당성에 대한 폭로와 비판)
 - 2-1. 민간 재건 업무? 핵심전투부대
 - 2-2. 지방재건팀의 본질(핵심 정찰부대)
 - 2-3. 한국 지방재건팀 활동의 본질
 - 2-4. 한국 기업의 이권 개입 현황
3. 오쉬노부대의 안전과 오쉬노 부대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인식
4. 나토군 일부가 속속 철수
5. 예산

오쉬노부대, 아프가니스탄 파병의 진실¹⁾

김어진 | 다함께

1.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현황

1-1. 파병 부대 현황

지역	부대	기간	규모	근거
아프간	해군수송지원단 (해성부대)	'01.12~ '03.12	LST 1척 171명 (연 823명)	한국 정부 제의 ('01.9.17)
	공군수송지원단 (청마부대)	'01.12~ '03.12	C-130 2대 76명 (연 446명)	미국 요청 ('01.11, '02.11)
	의료지원단 (동의부대)	'02.2~ '07.12	60-100명 (연 750명)	UN 결의안 1368호('01.9.12), UN 결의안 1373호('09.9.27)
	건설공병지원단 (다산부대)	'03.2~ '07.12	150명 (연 1,360명)	
아프간	아프간 오쉬노부대	'10.6~ 현재	350명 이내	UN 결의안 1890호 ('09.10.8)

1) 이 글은 저자가 마르크스 21 5호에 기고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과 지방재건팀의 정치경제학'에 실린 내용을 현재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 2012년 현재 오쉬노 부대의 총 인원은 395명임.
- 오쉬노부대가 속한 국제안보지원군은 나토군
 - 오쉬노 부대는 49개가 연합한 국제안보지원군(ISAF)으로 소속돼 있음. 국제안보지원군은 유엔군은 아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86호에 따라 결성된 군대로 유엔 책임 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2003년부터 나토가 지원하고 주도하고 있다.
 - 원래 미국 중심의 동맹국은 연합군사령부CFC-A를 구성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치안 유지 업무도 병행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나토군이 계속 밀린 뒤부터 CFC-A는 2006년 7월 아프가니스탄 작전권을 대부분 ISAF로 인계했다.
- 오쉬노부대가 주둔한 바그람 기지대는 미군과 나토의 핵심 부대
 - 바그람 기지는 14개국의 동맹군과 민간인들을 포함해 약 3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거대한 도시를 방불케 한다.
- 오쉬노 부대는 국제안보지원군(ISAF) 내에서 항공 경찰의 핵심 업무 담당
 - 오쉬노 부대의 바그람 기지대는 해외로 파병된 첫 육군항공 부대다.
 - 2012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한국의 지상전력과 UH-60 헬기를 사용하고 있다.

- 오쉬노 부대는 미측 OH-58, AH-64 헬기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연합 통합 화력훈련(Storm Surge)을 실시했다. 오쉬노부대는 아프가니스탄 접령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정찰 업무와 각종 수송 업무를 수행해 왔다.

1-2 아프가니스탄 전황

-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2014년까지 철수를 완료하겠다고 공표했지만 미국이 바라는 안정적인 철수 - 미군 기지들을 전역에 가동시키고 친미 카르자이 정권을 안정화시키는 - 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미군과 나토군대의 상황 장악 능력은 더 떨어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패배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데서 주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계속되는 민간인 사상자 발생

- 2012년 9월 17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여성 8명이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의 오폭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이슬람권 전역에서 들끓는 반미시위에 기름을 끼얹었다.
- AFP 등에 따르면 16일 새벽 2시쯤(현지시간) 나토군은 아프간 북부 라그만주 산악 지대에서 교전 중이던 반군을 겨냥해 공습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마을 여성 8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10살짜리 소녀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 피해 여성들은 아침식사 준비에 쓸 땀감을 모으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다
가 변을 당했다. 시신을 주도(州都)로 이송해 온 지역 부족들은 주지사 공
관 밖에서 “미국에 죽음을, 유대인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
의 시위를 벌였다.
- 당초 “반군 45명을 표적으로 삼아 정밀유도무기와 직접사격 등을 가했
다.”고 밝힌 나토군은 이후 민간인 살상 사실을 시인했다. 나토 국제안보지
원군(ISAF) 대변인 애덤 워잭 소령은 “불행히도 공습 도중 5~8명의 민간
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집계조차 되지 않은 사망자

- 2001년 10월 8일에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아프가니스탄인 사망
자 수는 정확하게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국제안보지원군이 집계하지 않
기 때문이다.
- 20만 명이 내부 난민이 됐고, 3백만 명이 난민이 됐다. 국제엠네스티의 보
고에 따르면 하루에 평균 400명이 난민이 되고 있다.
- 점령군 사망자 수는 2,670명으로, 그중 1,717명이 미군, 382명이 영국군이
다. 파병 점령군 사망자 가운데 2007년에 사망한 윤장호 하사도 있다.

○ 확산된 전쟁

-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파키스탄으로 확산됐다. 핵무장한 아프가니스탄의

이웃인 파키스탄도 전쟁에 휩쓸렸다. 미국 정부는 무인 정찰기를 사용해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국경 지역을 조직적으로 폭격했다. 미국에 위치한 군사 기지에서 이들 무인 정찰기를 조종했는데, 버락 오바마는 이들의 사용을 크게 늘렸다. 무인 정찰기의 폭격 때문에 이 지역에서 2천9백 명이 죽었다.

○ 올해 초에도 민간인 학살

- 남부 알코자이 마을과 나제에반 마을에서 민간인 16명이 살해됐다는 소식에 분노한 시위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발했다.
- 2012년 초 3월 11일에는 미군이 침대에서 자고 있던 민간인들 16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중 아홉 명은 어린이였다. 대부분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시신들은 담요에 싸여 불태워졌다. 두 마을은 5킬로미터가량 떨어져 있다.
- 살인자로 체포된 미군 병사를 비롯한 일단의 미군들은 ‘스포츠’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을 죽이는 군인폭력단 ‘살인팀’을 결성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들은 범죄를 숨기고 있는 동안에도 시신들의 일부를 소름끼치게 기념품으로 보관했다.

○ 미군의 코란 소각 사건

- 2012년 2월에는 바그람 미 군기지에서 쓰레기들과 함께 코란이 불태워진

것이 발견됐다. 수천 명이 외국의 점령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 1월에는 미군들이 아프가니스탄인 시신에 오줌을 누는 동영상이 발견됐다.

- 일련의 상황들 때문에 점령군에 대한 반감은 계속 누적돼 왔고 이것은 파병 부대의 형태인 지방재건팀에도 적용된다.

2. 파병 임무와 성격에 대한 분석(파병의 정당성에 대한 폭로와 비판)

2-1. 민간 재건 업무? 핵심전투 부대

- 국방부가 국방업무 보고에서 평가하고 있는 오쉬노 부대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방호 : 주 2~4회 PRT 호송 및 경호작전 실시(총 379회)
 - 헬기 항공 정찰 및 인원 공수 작전(총 1,049회)
 - 동맹군과 군사교류 : 對 IED훈련(급조폭발물), 적대세력 관련 정보 교환 등
- 위의 임무들을 보더라도 오쉬노는 전투부대로서의 자기 위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오쉬노 부대의 임무와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위 민관합동 군사활동의 모델로 회자되는 지방재건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

2-2. 지방재건팀의 본질(핵심 정찰 부대)

-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struction Team)은 국제안보지원군(ISAF1) 산하의 비정규 군대다. 일각에서는 ‘지방재건팀’을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봉사하는 민사기구라고 호도한다.
- 그러나 지방재건팀은 정규군에 속해 있으면서 각종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을 상대로 작전을 펼치는 군대다.
- 지방재건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앙정부의 입맛에 따라 움직일 지방 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까지 통치력을 행사하지 못해 ‘카블시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카르자이가 탈레반 세력이 강성한 가르데즈[아프가니스탄 동부 파티아 주(州)의 주도 — M21]에서부터 지방재건팀을 운용해야 한다고 간청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부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8개 지방행정구역으로 분할하고 지방재건팀을 동원해 ‘민사작전’을 실행했다.
- 식민화 정책 맞춤형 군대
-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상황의 핵심은 아프가니스탄 33개 주정부의 치안과 행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는 것이다. 점령군에 고분고분하면서

도 주민들을 잘 통제할 꼭두각시 정부가 없다는 뜻이다. 바로 이 때문에 점령군은 현지인들의 ‘민심’을 얻어 게릴라군과 일반 대중 사이의 연계를 끊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고 싶어한다.

- 그래서 미국과 나토는 개발 원조를 이용해 “전쟁 동맹”, 즉 하수인을 포섭하려는 노력을 강화했다. 특히, 오바마는 군사 행동과 개발 계획을 통합한 지방재건팀을 모델 삼아 작전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구해 왔다.
- 다시 말해, 지방재건팀은 개발 원조와 무력을 이용해 꼭두각시 정부에 봉사할 지역 하수인들을 획득하려는 점령군의 식민 정책에 봉사하는 수단이다. 지역 하수인들, 친미 군벌들은 마약으로 돈을 벌어들인다. 미국은 마약 퇴치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약 밀매에 연루된 군벌들을 비호하는데, 군벌들이야말로 마약 밀매를 주도하는 핵심 세력이다. 뉴욕대학 국제협력 본부의 연구 결과를 보면, 탈레반을 축출하는 미국을 도와 민병을 제공한 지방 군벌들은 마약 거래에 세금을 매겨 수익을 얻는다.²⁾
- 따라서 점령군이 탈레반의 마약 거래를 퇴치하겠다고 호들갑 떠는 것은 위선의 극치다. 게다가, 지방의 거대 군벌들은 자신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교역세를 걷어 돈을 벌고, 군소 군벌들도 지역 도로에서 통행세를 챙긴다. 흉작 때문에 올라간 식량 가격은 탈레반이 폐지했던 국내 통행세가 부활하면서 더 폭등했다. 점령군은 주요 지방 세력들의 악행을 묵인-방조한다.
- ‘국가 건설’이나 ‘국가 재건’이라는 표어의 함의는 중앙정부의 통치력을 확장하고, 옛 하수인들을 종속적 관계로 확실하게 재편하고, 적절한 하수

2) Barret R Rubin, ‘Road to Rubin: Afghanistan’s Booming Opium Industry.’ pp. 10-11. <http://www.cic.nyu.edu/archive/RoadtoRubin.pdf>

인들을 새로 발굴한다는 것이다. 물론 개발 원조 혜택은 전쟁에 협력하고 중앙정부에 충성하는 현지 실세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2001년부터 CIA와 미 국방부는 크고 작은 군벌들의 주요 후원자가 됐다. 한마디로 지방재건팀은 아프가니스탄 식민화 정책 맞춤형 군대라 할 수 있다.

- 식민화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무력이 필수적이다. 지방재건팀의 활동이 단지 주민들을 상대로 한 봉사 활동일 뿐이라는 말은 순전한 거짓말이다. 주민들이 점령군을 적대하지 않도록 각종 심리전, 치안 유지, 인도적 구호, 건설 등의 활동을 수행하지만, 이런 ‘재건 지원 활동’은 전투 작전에 종속된다. 이 점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됐던 한국군 지휘관의 다음 말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지방재건팀은] 과도정부의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 이동 순찰, 검문소 운용, 도로 차단, 방호수단 설치, 치안 위협 정보 수집[을 하고] … 현지에 정치적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동맹군 및 아프간 육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고] … 지역 내에 아프가니스탄 정규 군단 및 국경수비대 창설 과정을 감독[한다. 무엇보다 지방재건팀은] 신속대응군을 요청할 수 있는 요원을 편성하여 비상시 [에] 대비하[는 상시 전투부대다.]”³⁾

-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파견군 지휘관들은 지방재건팀의 성공 여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 작전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⁴⁾ 점령군이 주민들 속에서 ‘암약’ 하는 탈레반 세력을 몰리치려면 민간인을 상대로 작전을 펼치는 군대의 임무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

3) 채수문, ‘아프간에서의 21세기형 신개념 민사작전 고찰: PRT 작전개념과 운용을 중심으로’, 《군사평론》 363호, 97~99쪽.

4) 같은 글, 104쪽.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재건팀은 건설 공병 활동을 하면서도 비정규 전투도 일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 지방재건팀의 일상이 어떤지는 촘스키가 “극우 국수주의자”라고 일컫은 미국 언론인 로버트 카폴란이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을 밀착 취재해 쓴 르포에 잘 나와 있다.

우리 일행은 도요타 픽업 두 대와 MK-19 40밀리미터 유탄 자동 발사기가 장착된 험비 네 대로 구성된 차량 여섯 대에 나누어 탔다. 재건팀이 이번에 할 일은 남쪽의 파키스탄 국경 근처 사이코트 산맥에 들어앉은 한 외진 마을로 들어가 공사가 진행중인 학교를 점검하는 것이었다. ... 이번 임무는 밀워키 출신의 공수 유격대원 딘 프랭킹 소령이 지휘했다. 그의 지시 사항은 간단했다. “복병에게 습격당하면 제압 사격을 하며 계속 이동한다.”⁵⁾

2-3. 한국 지방재건팀 활동의 본질

○ 주된 업무는 정찰 전투 활동

- 이미 한국군은 아프가니스탄의 파르완 지역에서 미군과 함께 지방재건팀 활동을 해 왔다.(공식적으로 한국군은 2007년 12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지만, 2008년 2월 지방재건팀을 파견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 파르완 지방재건팀은 민사 업무로 파견된 미군 5명과 한국군 7명, 경비부대로 구성돼 있었다.⁶⁾

5) 로버트 카폴란, 《제국의 최전선》, 갈라파고스, 2007, 323~324쪽.

6) <http://www.globalsecurity.org>

- 그리고 행정과-정보과-작전과-군수과-통신과의 본부 지휘 체계에 따라 군사관찰과-전술심리전담-경계치안관찰팀-경계반이 특별 경호, 주민 관찰, 이동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⁷⁾ 이번에 파병될 한국군도 ‘민사 활동’과 전투 활동을 펼치면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가슴에 총구를 겨눌 것이다.

○ 미국과 나토를 위해 군사적 목적에 종속되는 소위 인도주의적 재건의 실체

- 무엇보다 재건 지원이 군사적 목적에 종속돼 있는 구조야말로 인도주의적 재건이 무망한 핵심 요인이다. 실제 2001년 이후 모든 공여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제공한 실질 원조액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쓴 돈의 7퍼센트에 불과하다.⁸⁾

- 개발 원조에 쓴다던 공여액은 주로 군사적 목적에 쓰인다. 지방재건팀이 도로 포장 공사를 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로매설폭탄IED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은 “태어나서부터 당나귀를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녀서 이렇게 좋은 도로가 없어도 잘 살았다. 차를 몰 만한 부자는 파르완에서 아주 소수다” 라고 말한다.⁹⁾

- 한국 정부가 보내는 물품과 장비는 대부분 경찰 치안 업무에 쓰였다. 2009년에는 구급차 1백 대, 경찰 순찰용 오토바이 3백 대 등 5백만 달러어치 장

7) 채수문, 앞의 글, 91~98쪽.

8) 광숙희, 앞의 글에서 재인용.

9) 김영미 분쟁 지역 전문 편집위원, ‘아프가니스탄 파병지 파르완이 안전하다고?’, 《시사IN》 115호(2009년 11월 23일자 호).

비를 지원했다.

- 2002년부터 한국 공병 부대와 의료 부대는 바그람 미군 기지에 주둔했다. 한국군은 평범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아니라 미군과 다국적군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다.

파병 한국군의 재건 지원 업무는 “비행장 활주로 및 기지 … 보수, 건물 신축 및 토목공사, 전기 공사와 주둔지 병커 작업 … 위험이 상존한 지역에서 생존성 보장을 위해 자체 병커 제작,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동 타격대 운용, 격주 1회 부대 방호 훈련”이었다.¹⁰⁾

○ 피죄죄한 지방재건팀의 ‘재건’ 실적

- 9년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 당국의 재건 실적은 너무도 피죄죄하다. 2001년에 세계은행은 2008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2백75억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목표를 계속 낮췄다. 45억 달러로 깎고, 다시 17억 달러로 깎더니 결국 아프가니스탄에 실제 들어간 돈은 14억 달러에 불과하다.¹¹⁾
- 2002년 9월 미국은 2004년 말까지 아프가니스탄에 학교와 병원 1천 개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2004년 9월까지 목표의 10퍼센트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그나마도 대부분은 기존 건물을 수리하는 수준이었다. <워싱턴 포스

10) 파병반대국민행동,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의 논리》, 2005

11) 정기만, ‘아프가니스탄 국가 건설 제한 요인 분석’,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78쪽.

트)는 미국의 재건 사업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완전 부실!”¹²⁾

- 한국 정부의 실적은 어떨까? 피죄죄함의 극치다.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공무원 교육원 건립과 아프가니스탄 이스타리프 소수력 발전소 건설 등에 총 17억 8천6백만 원을 지급했다지만, 이런 지원에 붙는 조건(한국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을 제하면 2006년 한 해에 실질적으로 지원된 물자는 고작 3억 4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아프가니스탄에 직업훈련원, 병원, 보건소, 공무원 교육 등의 프로젝트를 시행했고 많은 한국 NGO가 KOICA의 지원금을 받아 개발 원조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공무원 1천 명에게 컴퓨터 교육을 했고 카불공대 IT센터를 건립했다고 호들갑을 떠다. 다산부대가 파견된 파르완 주 마을 세 곳에 초등학교를 많이 지었다며, 이를 지방재건팀의 성과라고 했다.
- 그러나 2004년부터 2년간 한국이 새로 지은 학교는 겨우 세 개였다. 카불의 농촌 지역에서 초등학교 14곳을 보수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백만 달러를 들여 응급 병원을 보수했다지만, 이것을 ‘혁혁한 성과’라고 말하기에는 낮뜨겁다.¹³⁾ 이조차 완전히 무상 원조였던 것도 아니다. 전 아프가니스탄 주재 한국 대사는 2006년 런던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미국과 나토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무상 원조를 ‘유상 및 무상 원

12) 곽숙희, ‘아프가니스탄 개발 원조와 여성을 위한 과제’, 《젠더리뷰》(2008년 여름), 103~108쪽에서 재인용.

13) KOICA,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사업’, 《지구촌가족》(2007년 가을).

조'로 바꿨다고 했다.¹⁴⁾

- 게다가 이렇게 피죄죄한 원조의 진정한 수혜자가 평범한 아프가니스탄 주민인지도 불투명하다. 많은 연구와 현장 조사 결과를 보면, 아프가니스탄 원조는 오히려 공여국(원조 지급 국가)의 배를 불린다. 아프가니스탄 원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건부 원조로서, 공여국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그 결과, 수혜국이 받은 원조의 70퍼센트는 공여국에 '묶이게' 된다. 원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수주업체들은, 외국계 업체든지 아프가니스탄 업체든지 흔히 20퍼센트 이상의 이윤을 남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50퍼센트 이상의 이윤을 남긴다.¹⁵⁾
- 서구의 공식 해외 원조는 총액의 40퍼센트가 NGO로 직접 들어가는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빨리 빠져나가기도 한다. 정작 돈은 서방 업체와 거래하는 NGO 운영자들의 은행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2005년 6월 비영리 단체 액션에이드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아프가니스탄 재건 비용으로 책정된 미국 세금이 실제로는 결국 부유한 미국 기업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미 국제개발처USAID와 하청계약을 체결한 대체로 무능한 미국인 전문가들의 크게 부풀려진 인건비가 국제개발처에서 미국 은행 계좌로 곧장 입금되기 때문이다."¹⁶⁾

14) 유영방,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한국 정부의 원조', 《국제개발협력》 3호 (2006년 10월).

15) Malt Waldman, Aid Effectiveness in Afghanistan-failing Shot(Acbar Advocacy series), 2008 March, Agency Coordinating Body for Afghan Relief(ACBAR), p. 1. 광숙희, 앞의 글, 103~108쪽에서 재인용.

16) 조너선 닐 외, 《오바마의 아프파 전쟁》, 책갈피, 2009, 104쪽.

○ 현지 정부의 부패의 동아줄

- 재건 지원금은 공중에서 사라지기 일쑤다. 새로운 정부에서 자리를 차지한 특권층들이 외국 원조의 상당 부분을 착복했다.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 등이 해마다 아프가니스탄 축구 대표단에게 지원금을 보내지만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거의 없다.¹⁷⁾
- 재건 비용은 아프가니스탄 민중에게 가지 않는다. 2002년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4천만 달러를 줬는데 이 중 3천만 달러가 카불에 5성급 호텔을 짓는 데 사용됐다. 아프가니스탄을 재건하는 데 쓰겠다고 서구의 원조 자금은 현지 관리들의 호화 주택을 ‘재건’하는 데 쓰였다. 카르자이의 동료들은 빈민가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나토군의 보호를 받는 대형 주택을 지었다. 이 때문에 카불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 그래서 피난민 한 식구 정도가 살 수 있는 너절한 진흙 집 가격이 4백~1천5백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치솟았다.
- 또한, 점령국이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은 기업 부패의 복마전이기도 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로 공사 등 재건 사업을 여러 기업에 발주한 USAID와 세계은행은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로 시공 프로젝트를 따낸 미국의 루이스 버거 그룹은 이라크에서도 재건 자금만 챙기고 도망간 전력이 있다.¹⁸⁾

17) 김정현, 《아프가니스탄 그 절망과 희망 사이》, 휴먼비전, 2007, 178쪽.

18) 도로 복구 사업에 한국의 삼환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삼환기업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안전 조치에 전혀 신경쓰지 않아 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패는 이라크에서도 심각했다. 이라크에서 미국 기업들은 노동자와 시멘트 등을 들여오는 데 원래 가격보다 10곱절 많은 비용을 들었다. 미국 기업 파슨스는 의료 시설 1백42개를 짓는다며 1억 8천6백만 달러를 받았지만, 실제로 완공한 시설은 달랑 6개뿐이었다.¹⁹⁾

○ 과장된 의료행위의 목적

- 한국군이 아프가니스탄 주민 수만 명에게 지속적으로 의료 행위를 했다고 홍보하는 것조차 과장된 거짓이다. 파병 목적상 동의부대의 진료 대상은 다국적군이였다. 그래서 노르웨이 난민위원회 일원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주의 사업에 참가한 코너 폴리는 “2004년 이후 모든 인도주의적 사업이 대 게릴라전의 일부가 됐다”라고 회고했다.²⁰⁾

○ 우선적 재건 지원의 결과는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의 비참한 삶

- 도시민의 20퍼센트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상수도를 이용한다.
- 전화 보급 대수는 1천 명당 두 명밖에 안 된다. 전기는 전체 인구의 6퍼센트에게만 공급된다.²¹⁾

19) 나오미 클라인, 《쇼크 독트린》, 살림BIZ, 2008, 415~458쪽.

20) 반전평화연대 2009년 10월 27일 긴급성명

21) KOICA, ‘아프가니스탄 원조 실시 개요’ (2004년 3월), <http://www.koica.or.kr/data>

- 출산 중 산모 사망률은 1만 명 당 1천6백 명에 이른다. 이는 미국의 1백30 곱절이며 날마다 50~70명씩 사망하는 꼴이다.
- 빈혈, 태아 발육 저하, 사산 위험을 높이는 자궁 수축 부전 등 영양 부족과 산부인과 응급 처치 부족은 말할 것도 없다.
- 카블에 사는 미망인 중 65퍼센트가 고통과 슬픔을 잊을 방법으로 자살을 고민한다. 2007년 3월 이후 여성 폭행은 4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²²⁾

○ 점령이 막는 조건없는 무상 인도주의 원조

- 이런 현실을 보면,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원조를 더 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조건 없는 원조와 지원은 대폭 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점령과 전쟁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 “이미 1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거의 절반이 원조 개발 노동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출입 금지’ 지역으로 설정됐다. 국제적십자위원회 같은 NGO들은 대부분 무장 호위를 받으며 분쟁 지역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 점령군과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일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미국 정부의 직접 원조를 늘려 NGO의 구실을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원조가 군사화하면 진정한 목표가 전쟁을 지속하려는 것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오로지 점령을 중단해야만 제대로 된 지원과 원조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22) 강은희,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경험하는 삶의 질과 PTSD 증상과의 관계’, 한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 5쪽.

점령을 지원하는 한국군 재파병은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의 삶을 재건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4. 한국 기업의 이권 개입 현황

○ 왜 중앙아시아인가?

- 브레진스키는 국제 정치의 슬기라 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중국의 신장, 카자흐스탄에서 아라비아 해에 이르는 지역)을 “글로벌 발칸”이라고 불렀는데, 이 지역의 심장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다. 따라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정책은 세계라는 장기판 위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전략의 결정체다. 미국의 입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건설적인 행동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불안정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으로 필요한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²³⁾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제2의 베트남이 되었다.
- 흔히들 아프가니스탄을 지독한 내전의 나라로 여긴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아프가니스탄이 근대화가 덜 된 나라여서도,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미개’해서도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해서 이곳을 장악하면 세계 패권을 행사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과 카스피 해와 중앙아시아의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그동안 미

23) 조너선 닐 외, 앞의 책, 113~114쪽.

국과 영국을 비롯한 나토 소속 국가들, 러시아, 파키스탄, 중국 등이 각자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세력들을 지원하면서 내전을 부추겼기 때문이다.²⁴⁾ 1980년대 미국뿐 아니라 파키스탄, 중국,²⁶ 이스라엘, 이집트까지 반소 군대를 지원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1989년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뒤 반소 군대 무자헤딘의 여러 분파들을 지원한 국가 사이의 동맹 관계는 산산이 해체되고 내전은 더욱 극렬해졌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견제하려 한 이란은 하자라족을, 프랑스는 아마드 샤 마수드를, 소련은 우즈베크족의 도스툼을, CIA와 파키스탄 군부는 탈레반을 지원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지독한 내전에 휩싸였다.²⁵⁾

- 이 모든 것은 카스피 해와 중앙아시아의 천연 자원에 더 강력한 빨대를 꽂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미국은 이란을 거치지 않고 그곳의 천연 가스 와 석유를 인도양으로 빼낼 수 있는 송유관 설치에 집착했다. 러시아 군대 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지 10년 후인 1998년에 평화유지군으로서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됐는데, 러시아군의 임무는 중앙아시아에 저장된 석유와 가스를 조사하고 보호하는 것이었다.

○ 송유관의 이해관계

- 미국이 옛 소련에 이어 10년 가까이 점령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 이 땅은 송유관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기도 하다. 카스피 해 연안의 석

24) 중국이 반소 군대를 지원한 것은 아프가니스탄과 맞닿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들을 골칫거리로 여겼기 때문이다.

25) 타리크 알리, 근본주의의 충돌, 미토, 360쪽.

유와 천연 가스가 이란을 거치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인도양으로 나가는 노선인 TAPI(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 파이프라인은 1995년에 투르크메니스탄과 파키스탄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에 건설되기 시작했다. 1996년 당시 여기에는 주요하게 유노칼(셰브론 계열사)과, 중앙아시아가스파이프라인CentGas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다음의 기업들도 참여했다. 러시아의 가스프롬, 사우디아라비아의 델타오일, 일본의 인펙스INPEX와 이토추Itochu, 파키스탄의 석유 기업, 그리고 한국의 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중단된 공사는 2008년에 다시 재개됐다.

- 현대가 여기에 적극 참여한 이유는 중앙아시아에 미개발 자원이 막대하게 매장돼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최대 에너지 수출 시장인 EU가 인접해 있어 개발한 에너지를 수출하기에 지리적 여건이 좋기 때문이다. 북해산이나 러시아산 우랄유를 수입해 정제해서 수출하는 것보다 중앙아시아에서 바로 정제해 수출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 최근 중앙아시아와 카스피 해의 자원을 얻으려는 한국 기업들의 이권 개입이 매우 두드러진다. 카스피 해 에너지 자원 탐사 전문가는 “한국도 자체적으로 점증하는 에너지 필요 때문에 카스피 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말한다.²⁶⁾ 2007년에 한국은 추정 매장량 10억 배럴 규모의 대형 유전인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에서 2.7억 배럴을 확보했다. 한국 석유공사는 카스피 해 이남 광구를 탐사했고, 금-몰리브덴-동 등 아제르바이잔에 풍부하게 매장된 광물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해 최근에는 관

26) 마이클 클레어, 《21세기 국제 자원 쟁탈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8, 255쪽.

련 협정을 모두 체결했다. 2006년 BTC(바쿠-트빌리시-제이한) 송유관과 SCP(남부 캅카스 파이프라인)를 완성해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 아제르바이잔이 카스피 해의 에너지 물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어, 한국 정부는 아제르바이잔 내 석유 광구와 송유관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 아프가니스탄에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기업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무력 장치라 말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한국군 지휘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PRT의 성공 여부는 … 아프간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 등으로 한국이 외교적-경제적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²⁷⁾
- 9년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수렁에 빠진 미국과 나토에게 한국군 재파병은 숨통을 틔워주는 구실도 한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무기 보급로가 막혀 끙끙대고 있던 차에, 최근 미군기지를 폐쇄한 우즈베키스탄에서 나보이 공항 개발권을 따낸 이명박과 한진그룹이 새로운 보급로를 뚫어주는 구실을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 이라크 파병 이후 한국 기업과 정부의 이권 참여

- 쿠르트 유전 지역의 채굴권 경쟁에 뛰어들어 현재까지 31억 배럴 규모 초 대형 광구들의 채굴권을 따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이 사회기반시설 건설 사업과 연계하는 패키지형 사업의 성공 사례라며 자화자찬한다. 이 사

27) 채수문, 앞의 글, 111쪽.

업에는 운영권자인 석유공사(지분을 50.4퍼센트)를 비롯해 SK에너지(15.2퍼센트), 대성(7.6퍼센트), 삼천리(7.6퍼센트), 범아(7.6퍼센트), GS홀딩스(3.8퍼센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이곳에서 채굴한 원유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 그러나 증동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예상만큼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특히 이라크의 쿠르드족 자치지역에서 유전 개발권을 얻는 것은 상당히 큰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사담 후세인에게 흑심하게 탄압받던 쿠르드족 지배층의 일부는 철저하게 미국에 동조했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후에는 미국과 함께 이라크의 석유와 부를 나눠먹는 데 여념이 없었다. 미군의 점령을 적극 돕는 부역자로 인식되는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라크 중앙정부와 거들거들 갈등을 빚는다. 이로 말미암아 이라크 석유법이 통과되기도 힘들고, 통과되더라도 송유관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을 것이므로 이것도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 더욱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느 때보다 점령군과 탈레반 사이의 전투가 치열하고 전황은 침략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은 침략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렸다. 1839~1842년 제1차 영국-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영국군은 1만 6천 명 중 극소수만 살아남고 케멸되다시피 했다. 1878~1880년 제2차 전쟁에서는 영국이 승리해 카불에 영국 외교사무소가 설치됐으나 얼마 되지 않아 모든 직원이 살해당했다. 19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 역시 10년 간 사상자 5만 명을 내고 결국 10년 만에 퇴각해야 했다. 그래서 영국의 처칠은 일찍이 아프가니스탄을 가리켜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했다. 지금 이명박은 그 지옥에 한

국의 청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는 것이다.

3. 오쉬노 부대의 안전과 오쉬노 부대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인식

: 14차례의 박격포 공격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 국방부는 오쉬노 부대가 완벽한 임무 수행으로 “PRT 안전보장, 피해사항 전무”라고 말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항공 활동에 국한된, 한마디로 입증할 수 없는 허위 보고라고도 말할 수 있다.
- 2010년 7월 재파병 이후 자그마치 14차례에 걸린 박격포 공격
- 파르완 주의 위치- 가장 위험한 지역(지도 추가, 지역의 특징, 탈레반 세력이 2010년 전후로 급부상한 지역, 바그람 미군기지)
- 2010년 재파병의 특징은 앞서 지적했듯이 더 공격적인 전투 활동으로 요약된다.
- 한국군 파병 지역을 직접 취재한 김영미 피디의 증언
 - 그녀는 지방재건팀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매우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재건팀 사업을 하면서 마을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분으로 걸핏하면 집집마다 수색을 벌이는 미군을 보며 느끼는 주민들의 반감은 크다.

- 아프간 민간 방송 아리아나 TV 기자로 파르완에 상주하는 파이살 씨는 “미군이 PRT라는 간판 뒤에서 정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주민은 상처를 받았다. 학교 설립을 탈레반 정보 획득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도 생겼다”라고 말했다. … 아프간 신문 ‘카불 타임스’ 파르완 지국 기자인 예 니에슈 씨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8년간 파르완에서 미군 PRT 사업은 주민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 그 정점이 2005년에 벌어졌던 반미 시위이다. 미군의 재건 사업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한다. 미군과 공조한 부패 관리도 미워한다. 지역 관리에게 PRT 사업은 돈을 뜯어 낼 좋은 기회다. 어떤 공사를든 지역 행정관리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알면서 공사를 강행하는 미군과 이를 악용하는 관리 모두를 경멸한다.”²⁸⁾
- 그 결과 지난 8년 간 파르완에서 미군 43명이 목숨을 잃었다. 따라서 “파르완 지역 민심이 외국군에 적대적이지 않아 안전하다”고 강조한 한국 정부의 설명은 완전한 거짓이다.

4. 나토군 일부가 속속 철수

- 예정보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해외 파병 군대들이 속속 일찍 철수 하겠다고 발표했다.

28) 강은희,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경험하는 삶의 질과 PTSD 증상과의 관계’, 한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 5쪽.

-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불가리아 병력 가운데 일부가 2012년 8월 4일(현지시간) 복귀했다. 162명을 포함한 군인 232명은 이날 불가리아 소피아 공항에 도착, 환영을 받았다고 소피아 뉴스 통신이 보도했다. 전투병들은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의 경비를 맡았고 헌병으로도 활동했다.
- 뉴질랜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국 군대의 임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예정보다 1년 빨리 내년에 철수할 것이라고

5. 예산

- 해외파병 관련 예산은 국방 예산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감율을 보인 항목이다. 그 이유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역도 밝혀져야 한다.
- 세계에서 최빈국의 주민들을 정착하는 데에 쓰일 돈은 학교와 보건 등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조건없이 쓰여져야 한다.

구분	'11 예산	'12 예산안	증 감	%
계	8,088	8,186	98	1.2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7,325	7,461	136	1.9
주한미군시설부지지원 등	490	402	△88	△17.9
해외파병	173	226	53	30.6
무관부활동	100	97	△3	3.0

* 출처 : 2012년 국방부 예산안

년도	오위노 부대 파병예산
2010	471억

* 출처 : 2010년 국방백서

반전평화연대는

반전평화연대는 강대국의 패권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연대체입니다. 반전평화에 동의하는 제 단체와 개인들의 광범한 연대를 통해 대중적 반전 운동을 벌여나갑니다.

반전평화연대는 강대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과 점령 반대, 한국 정부의 전쟁·점령 지원 반대, 한반도 평화라는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 점령 종식, 파키스탄으로의 확전 반대,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포함한 점령 지원 반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반대, 상시파병법(PKO법) 제정 반대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